

## 목 차

---

### ◆ 논문

지역자활센터의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본 ..... 3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의 필요성	
- 안보람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측정방식에 대한 연구동향 ..... 19	
- 노영준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연구동향 ..... 42	
- 윤석진	
공정무역 국내 연구동향 ..... 69	
- 최혜연	



## 지역자활센터의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의 실효성

안보람\*

###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1990년대 도시 빈민지역의 생산협동조합과 생산자공동체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자활사업과 협동조합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 차원으로 제도화되면서 협동조합의 성격은 약해졌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2014년 정부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사업을 시범 실시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로 전환 이후, 기존과 달리 매출액의 50%를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재원 활용의 자율성은 자체 사업개발과 수익 창출로 이어져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실제 사업참여자들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전환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참여자들의 낮은 근로 능력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자활 정책이 개선되어야 참여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주요어 :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 쿠팡협동조합, 매니저 (raemiyoun@naver.com)

## The Effectiveness of the Conversion of Social Co-operatives through the case of the Pilot Project for Type Diversification of Local Self-Support Centers

AHN, Boram\*

### Abstract

Since Korea's 'Self-Support Programs' originated from 'Production Co-operatives' and 'Producer Community' movements in urban poor areas in the 1990s, it can be said that the 'Self-Support Programs' and Co-operatives are in the same vein.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Self-Support Programs were institutionalized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character of Co-operatives weakened.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t became possible to establish Social Co-operatives that provide jobs and Social Services to local residents and the vulnerable group. As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operatives became possible, in 2014, the government conducted a pilot project to convert Local Self-Support Centers into Social Co-operatives by linking employment and welfare. After conversion to a 'Local Self-Support Centers in the form of Social Co-operatives', 50% of sales could be used directly for business expenses, unlike in the past, and the autonomy of the use of finance led to business-development and profit creation, which had a positive effect. However, the low level of understanding of Social Co-operatives by project participants and the low working ability of the participant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before the transition,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ition to a Social Co-operative. It will be easier for participants to actually participate in Social Cooperatives only when Self-Support Policies are improved

Key words : Self-Support Programs, Local Self-Support Centers, Self-Support Enterprise, Social Co-operatives, Pilot Project to Convert Local Self-Support Centers into Social Co-operatives.

---

\* CoopY Co-operative, Manager (raemiyoun@naver.com)

## I. 서론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와 시장은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국가 정책은 재정 부족의 문제와 국가 행정의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을 드러내며 실패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장주의자들의 민영화 움직임은 과도한 이윤추구와 경쟁을 부추기며 빈부격차가 더 확대되는 등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이상봉, 2022). 이처럼 국가와 시장이 각각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타개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의 폐해로 발생한 빈곤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스스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역 단위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이른바 생산협동조합, 생산공동체로 결실을 맺었다(김형미, 2019). 한편 이러한 실천사례들은 정부 정책을 움직여 1996년 복지와 노동이 연계된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설치로 이어졌고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자활사업은 제도화되었다(김형미, 2019).

1996년 이후 생산공동체, 생산협동조합들은 자활지원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협동조합의 성격이 열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활공동체는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3조 2항의 “저소득층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조·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장려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김형미, 2019; 김정원, 2012; 지규옥·김홍주, 2018; 보건복지부, 2022).

하지만 자활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측면이 강하다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조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다. 이런 가운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두 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자활사업에 있어서 다시 한번 협동조합과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었다.

정부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자 욕구에 따라 자활사업 유형을 구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2014년 지역자활센터의 법인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백학영 외, 2017: 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자활센터에 관하여 사례 연구를 한 논문들을 문헌 연구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의 영역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경제와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의 실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다.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자활센터의 사례연구를 검토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 실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이론적 배경

### 1.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를 최초로 개념화한 학자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샤를 지드(1848~1932)인데 그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같이 이타적 협력과 상호부조 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을 사회적경제로 규정하였다(강민수, 2012; 신창환, 2015에서 재인용). 김경휘·백학영(2019)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개념이 아직 불분명하며,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서도 아직 정의, 형태, 담당부처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가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이라는 데는 동의가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다(김경휘·백학영, 20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역시 사회적경제에 대해 국가·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4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자들 역시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조직으로 자활기업과 함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을 꼽고 있다(김경휘·백학영, 2019; 김형돈, 2019).

사회적경제 논의에 있어서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주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걸, 2014; 신창환, 2015:3 에서 재인용). 한편, 보건복지부(2022)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의 자활기업이란 첫째,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자활기업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둘째,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공헌이나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같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은 다른 개별 협동조합과는 달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종 구조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별도로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보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기획재정부, 2020).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기본법 제2조 3항).

따라서 배당이 금지되고, 설립에 있어서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협동조합이 사업 업종과 분야의 제한이 없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하는 공익성을 띤다. 청산 시에도 유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재단, 국고에 귀속되는 등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수많은 실천사례와 이론적 논쟁을 거쳐 제도화에 이르렀다면 한국의 경우 이론적 논쟁을 거쳐거나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아닌 정부에 의해 제도화 된 측면이 있다(이상봉, 2022).

## 3.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 1)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 예방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부, 각 시도·군·구 및 읍·면·동이 자활센터와 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자활사업을 시행하며 고용복지부, 고용센터는 취업지원을 관리·시행한다(보건복지부, 2022).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이 취업과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키우고 자립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영역은 간병, 청소, 집수리, 자원 재활용과 같은 ‘전국 표준화 사업’과 주택 개보수, 돌봄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민간 연계사업 등 ‘전국 단위 사업’,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유형은 참여자의 사업유형과 자활 능력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①근로유지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 ④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된다. 자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80점 이상은 집중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하지만, 80점 미만의 경우 ②, ③, ④번 사업에 참여하고 45점 미만 대상자는 ①번 사업에 참여한다(보건복지부, 2022). 이 중 ①근로유지형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며 나머지 세 유형은 지역자활센터와 민간위탁기관에서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22).

## 2)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목적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2: 139).

지역자활센터는 ‘지정’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이나 자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지역에 다수의 신청인(법인 등)이 있을 경우, 자체심사 등을 통하여 최종 하나의 신청인(법인 등)을 선정 후 지정한다(보건복지부, 2022).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없거나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자활센터 직접 신청(운영) 가능(보건복지부, 2022: 140)하다.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은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22: 147).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실시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사업공모를 하여 위탁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2: 73).



### 3) 자활기업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창업 지원 정책으로 시작한 ‘자활공동체’는 2012년 개정으로 명칭이 자활기업으로 변경되고 설립 요건도 사업자등록상 2인 공동사업자에서 1인 이상 사업자로 완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22: 106).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보건복지부, 2022: 107)을 가지며 조직 형태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조합 설립 절차는 관계 법령(「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보건복지부, 2022: 108).

한편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 김형돈(2015)은 이렇게 ‘인정’을 받는 형태에 대하여 ‘규범적 조직 형태’라고 규정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가 협동조합만이 법적 조직 형태를 가질 뿐, 나머지 사회적경제 조직은 각각 법적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법적 지위와 규범적 지위가 혼재되어 사회적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이면서 자활기업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형돈, 2015: 152)는 것이다.

김경휘·백학영(2019)도 자활기업이 자활기업 자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임에도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를 덧입는 독특한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김경휘·백학영, 2019: 124)고 지적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활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정책자금의 대상이 되고 예산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자활기업이 참여자들의 근로 능력 및 자활기업 업종의 경쟁력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정부나 지자체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의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활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김경휘·백학

---

\*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22: 107)

영, 2019).

### III.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 1.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배경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취업우선정책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은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낮은 참여자들만이 지역자활센터로 주로 유입되었다(백학영 외, 2018; 지규옥·김홍주, 2018). 참여자의 취·창업률과 수익 창출률을 통해서 자활 성과를 평가받는다든 점에서 이러한 지역자활센터의 상황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예산 투입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지규옥·김홍주, 2018). 또한 2000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복수 지역자활센터의 통폐합 이야기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동하였다(지규옥·김홍주, 2018: 89).

이러한 자활사업 자체의 정체성 위기와 지역자활센터의 위기로 인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고(지규옥·김홍주, 2018) 비록 지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조직의 지속을 위한 하나의 선택(백학영 외, 2018)으로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에 참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

#### 2. 유형다변화 사업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이 논의되기에 앞서 2013년 3월에 발표된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는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복지·일자리 재정지원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의 참여를 확대하였다”(홍효석, 2022: 99)

그리고 2013년 12월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는 「고용-복지 연계 정책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는데 자활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백학영 외, 2017).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 자활사업단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하여 참여자의 취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성과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참여자 욕구에 따라 자활사업 유형을 구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목적(백학영 외, 2017 : 16)”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 형태 전환을 희망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백학영 외, 2017). 시범사업 초기 계획에 의하면 조합 형태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모법인,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이었으며,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조합원을 구성하였는데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는 직원 조합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했으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는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했다. 그리고 자활근로참여자의 경우 해당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백학영 외, 2017).

중앙자활센터(2016)에 의하면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의 목적은 ①자활사업 대상자 확대와 참여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통한 ‘사업 운영 자율성’ ②지역사회 기반의 고용-복지 생태계 조성 및 질 높은 지역사회 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자활센터 지역 네트워크 강화’ ③자체 수익모델 개발과 자체 고용능력 확대를 통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의 효율화’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자활센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지역공동체 기반 일자리,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중앙자활센터, 2016).

#### IV.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이후 변화

2018년에 각각 발행된 지규옥·김홍주의 “자활사업의 대안적 실험: 사회적협동조합”과 백학영·김경휘·한경훈의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정과 변화에 대한 연구”는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이후 지역자활센터를 사례연구한 것으로 ‘전환’ 이후 지역자활센터의 직접적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사례이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전환 이후 긍정적 요인으로는 기존 지역자활센터와 달리 매출적립금 중 일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이하 ‘사협센터’로 통일)의 재정 활용의 자율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협센터는 기존의 지역자활센터와 마찬가지로 매출적립금 중 일부를 ‘내일키움장려금’과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 적립하였으나 그 비율에 있어서 기존 지역자활센터가 각각 20%와 60%를 적립하였다면, 사협센터는 각각 20%, 30%만 적립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운영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백학영 외, 2018). 이 운영지원비는 사협센터의 직접사업비로 쓰며, 남은 운영지원비는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다(백학영 외, 2018). 이러한 차이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활사업 안내’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자활센터는 매출의 80%를 ‘지역 자활사업 지원비’\*로 활용하되, 해당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운영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2: 181). 이러한 재원 활용의 자율성은 새로운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익구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고 업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재투자에 사용 가능하여 참여자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지규옥·김홍주, 2018). 또한 매출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종사자들의 적극성과 책임성 증가에도 영향을 주어 전문성 제고에도 영향을 주었다(백학영 외, 2018). 물론 이에 따른 사업개발 부담감과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직원들에게서 발견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사업참여자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지규옥·김홍주, 2018).

사협센터로 전환한 이후 발견된 또 다른 긍정요인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협력이 이루어진 점이었다. 백학영 외(2018)에 의하면 기존의 지역자활센터가 정부의 전달체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전환 이후에는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인식되어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증가하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사회적경제 기관으로 인식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지규옥·김홍주(2018)와 백학영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사업참여주민 자체의 변화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앞서 지역자활센터의 위기 상황에서 언급되었듯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더불어 참여자 자체의 노동능력 저하는 사업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낮은 이해도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를 고려하여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자금 출연에 거부감이 있었고(지규옥·김홍주, 2018; 백학영 외, 2018)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실제 참여자의 이익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백학영 외, 2018).

사협센터의 조합원 구성을 보면 직원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 순으

---

\* 매출액의 일부를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참여자 인센티브,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활용(보건복지부, 2022: 181)

로 참여가 이루어져 결국 직원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보였다(백학영 외, 2018). 전환 과정 자체가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반형성 단계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백학영 외, 2018), 앞서 나온대로 참여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기때문에 출자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자체에서도 자활근로참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시행(백학영 외, 2017)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사협센터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참여주민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문제에 대한 걱정과 함께 결사체로서의 성격보다는 비즈니스의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백학영 외, 2018).

## V. 결론

이상의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자활센터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자활사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사회복지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은 자활기업과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의 목적이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자 욕구에 따라 자활사업 유형을 구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백학영 외, 2017: 16)”이라는 점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봉(2022)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민은 그저 시혜나 구제의 대상으로 여겨질 뿐 그 과정에 참여하기가 힘들었(이상봉, 2022: 102)지만,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으로 이어져 공적서비스의 수혜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주체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신창환(2015)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우 그들의 목소리를 조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단순한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참여자로 조직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신창환, 2015: 101)라고 지적하였다.

유두호·엄영호(2020)는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사회적가치 창출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나 후원금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성과가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주사업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조합원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지속성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자를 확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협센터로의 전환 사례 연구 결과, 실제 사업참여자들의 사회적협동조합 이해도는 낮고 참여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선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전환 자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지향하고 전환을 준비할 때 가장 큰 장애 요건으로 나타난 것은 이윤의 사회적 분배 기준이었는데 참여자들이 자체의 경제적 이익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가치 인식과 정당성 동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꼽는다(백학영·조성은, 2009; 김경휘·백학영 2019에서 재인용). 참여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출자금을 출연하는 것과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어떠한 조직 형태도 협동조합 법인 외에는 법 자체에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규정한 경우가 없고 정부 차원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지원(구정옥, 2017)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협센터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한편, 하승범·신원식(2020)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개정(안)’이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중 미참여자를 발굴하여 유선 연락 등으로 일자리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자활사업을 안내(보건복지부, 2019: 3)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수 증가라는 성과를 내었지만, 이 시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처한 환경이 여전히 불안하고 학력, 건강, 연령 등 ‘인적자본’이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곧 일반 시장에서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자활사업의 목표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승범·신원식, 2020: 165)되고 있다고 하였다.

김자옥·유태균(2018)도 열악한 경제 상황과 참여자의 낮은 인적자본이라는 조건에서 참여자에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얻거나, 창업하여 소득보장을 이룸으로써 탈수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기대라고 볼 수 없다(김자옥·유태균, 2018: 41)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환사례를 연구한 지규옥·김홍주(2018)는 지역자활센터는 ‘취업률

제고'라는 제도적 담론 속에서 현실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들을 데리고 사업단을 운영하여 목표 매출액을 달성해야 하고, 나아가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지규옥·김홍주, 2018: 98)고 지적하였다. 결국 자활 정책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전가된 듯한 상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자활 정책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강점을 살리기보다 근로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러 공급기관 중 하나로 간주하고, 정부 지원을 매개로 이들 조직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노대명 외, 2013: 9 ; 지규옥·김홍주, 2018에서 재인용)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사협센터의 긍정적 요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재원 활용의 자율성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얻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재원 활용의 자율성은 시범사업의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제도 지원에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휘·백학영(2019)는 자활기업이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역으로 자활기업 단일 유형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결국 자활정책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승범·신원식(2020)은 2019년 하반기 자활사업 활성화 대책 이후 늘어난 '참여 2년 미만'의 신규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유형을 연구하여 '적극적·소극적 자활 추구형'과 '참여 안주형' 세 가지의 인식유형을 도출한 바 있다. 이처럼 자활참여자들 자체에서도 각각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봉(2022)은 국가와 시장이 각각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과 같은 제3섹터는 그들과 병존하면서 국가와 시장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자활사업의 참여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있고 사회적경제 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은 자활기업을 취약계층 노동통합의 초기 단계로 간주하고,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다음 단계로 보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에서 단계적인 역할 분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김형돈, 2019: 151).

취약계층이 노동을 통해 자활을 하는 것은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나친 성과주의는 조직 구성원들의

근로 의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자활사업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잉여금의 적립 및 재투자는 결국 협동조합의 특징인 참여를 통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환경은 갖추어져야 현실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지속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2014년에 시작된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규옥·김홍주(2018)와 백학영 외(2018)가 비교적 시범사업 초기에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된 자활센터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이후 일반 지역자활센터로 전환을 추진했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최종 인가된 센터에 대한 사례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의 실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전환에 따른 긍정적 요인으로 제시되었던 재원 활용의 자율성이 자활센터의 사업 운영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 또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민수(2013),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협동 조합”, URBAN AFFAIRS , 2012(10), 19-24.
- 구정옥(2017),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교육 현황과 문제점. 한국협동조합연구, 35(1), 115-143.
- 기획재정부(2020), 『협동조합 업무지침』.
- 김경휘, 백학영(2019),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과 특성 비교 분석" 한국사회정책 26(2), 115-145.
- 김세운, 정현, 서인석(2019), "협동조합의 조직성과와 영향요인, 그리고 유형의 조절효과: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행정연구 33(2), 181-208.
- 김자옥, 유태균(2018), "자활사업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2), 39-64.
- 김종걸(2014),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일본학보 , 100, 181-19.
- 김형돈(2019),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특성 비교연구-목적, 성과, 상충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4), 125-158.
- 김형미(2019.), “1970년대 이후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궤적”,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II 저항과 대안』,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편찬위원회, 북돋움, pp. 80-117
- 노대명, 김신양, 원일(2013), 『자활사업의 사회적경제 연계 등 다변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학영, 김경휘, 한경훈(2017),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지역자활센터 발전방안 연구』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 백학영, 김경휘, 한경훈(2018),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정과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5(4), 265-299.
- 백학영, 조성은(2009),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3), 269-297.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자활사업 안내(Ⅰ)』.
- 신창환 (2015), “사회적 경제의 실천 조건과 정책을 통해 본 사회적 협동조합의 과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8(2), 91-119.
- 유두호, 엄영호(2020),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영향요인 분석 : 조직 내부요인과 지방정부 역량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3), 59-92.
- 이상봉. (2022). 제3섹터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미와 대안적 가능성. 대한정치학회보, 30(1), 93-118.
- 조미형. (2014).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 탐색. 농촌지도와 개발, 21(3), 91-119.
- 중앙자활센터(2016),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추진방향>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성과공유 간담회 자료)
- 지규옥, 김홍주(2018) "자활사업의 대안적 실험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연구 26(2), 81-102
- 하승범, 신원식(2020), "신규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의 전망 및 자활의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6(2), 163-189.

홍효석(2022),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8(1), 105-113.

##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측정방식에 대한 연구동향: 2012년 ~ 2022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노영준\*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측정방식에 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식, 그리고 관련 하위요소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측정 관련 논문 16편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매년 1편 이상 게재되었다. 2018년도 이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국협동조합연구에서 총 6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둘째, 사회적 성과는 각 연구자마다 협동조합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분배,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조직이 창출한 성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성과 평가모형은 BSC, SPC, SVI, 부가가치회계 등을 사용하였고, CSR 등의 이론을 토대로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 연구 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많다. 넷째,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분하였는데, 정량적 지표는 다시 화폐가치와 비화폐가치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량적 지표보다 정성적 지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정량적 지표에서 하위지표는 화폐로 측정가능한 화폐가치로 측정한 지표와 조합원 증가율, 고용율 등 화폐가 아닌 수치로 측정한 비화폐가치 지표가 있다. 정성적 지표는 협동조합 7원칙에 기본가치인 정체성을 포함하여 하위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가 현행 사회적 성과 평가모형 개발 흐름과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파악하였다.

키워드: 협동조합, 사회적 성과, 사회적 가치, 문헌연구, 성과 측정방식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agnes.rr7@gmail.com

## Social impact evaluation trends of cooperatives

Ro, Youngjoon\*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finition, measurement method, and related sub-factors of cooperatives by analyzing the research trend on the social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of cooperatives. To this end, 16 papers related to the measurement of social value of cooperatives published in domestic-listed journals from 2012 to 2022 were analyzed,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one paper on the social value of cooperatives was published every year. It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18, but overall, it has not increased rapidly. In the study of Korean Society for Cooperative Studies, there were a total of six papers, and the most researched papers. Second, social value is defined by each researcher, as achieving the principles of cooperativ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air distribution to stakeholders, and achievements created by organizations that prioritize social purposes. Third, the social value measurement model used BSC, SPC, SVI, and value-added accounting, and there are studies that evaluate social value based on theories such as CSR.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many cooperatives established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ourth, social value evaluation indicators were classified into quantitative indicators and qualitative indicators, and quantitative indicators were again classified into financial and non-financial values. Most studies use more qualitative indicators than quantitative indicators. Fifth, in quantitative indicators, sub-factors include indicators measured by financial value that can be measured by currency, and non-financial value indicators measured by non-financial figures such as union member growth and employment rate. Qualitative indicators consisted of sub-factors, including identity, which is the basic value of the 7 principles of cooperativ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value of Korean cooperatives showed a difference from the current trend of development of social value evaluation models.

Keywords: Cooperatives, Social Performance, Social Value, Literature study, Value Measurement Method

---

\* Hankyoreh Economy and Society Research Institute(HERI), Research Associate, agnes.rr7@gmail.com

## I. 서론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로 인해 시장경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생존과 사회 복구에 영향을 미친 비즈니스 모델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도 빈곤, 먹거리, 의료, 복지 등의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삶을 회복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였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 조직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22년 6월 기준, 2만 2천 개를 넘어섰다(COOP 협동조합, 2022). 제정 후 10년이 지난 현재, 협동조합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양적 성장만큼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협동조합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조합원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은 조직 내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조직의 생존을 위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무적 성과 측정방식에 따라 사회적 성과를 표준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조직을 포괄한 공통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조직의 수만큼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연구한 논문들이 다양하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각 연구마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enterprise)로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용덕·김은희, 2016).

1990년대 산업화와 자유화 등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은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빈부격차, 환경파괴, 단절된 관계 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협동조합은 성장하였다. 통합되지 못하고 각 업종별, 지역별로 형성된 협동조합을 통합하고, 다양한 협동조합의 제도적 기반을 쌓고자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을 토대로,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조합원이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법인격을 갖춘 조직으로 설립 가능하여 그 수가 점차 늘어났다(이재희·윤민화, 2018). 협동조합의 양적성장은 자연스럽게 조직의 지속가능을 위한 질적성장의 욕구로 이어졌다. 협동조합이 장기 지속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재정안정성, 금융접근성 등 외부 인프라에 대한 접근에 필요성을 느끼며 성과평가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기존 주식회사 등에 맞춰진 성과평가가 아닌, 협동조합의 특징과 강점을 드러낼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평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도 증가하였다.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모형은 다양하나, 모든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모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성과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 2.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 평가모형

사회적 성과는 협동조합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기에 전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평가모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대체로 목적이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화폐로 측정하기 어려운 사회적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조상미 외, 2018 재인용). 현행 사회적평가 연구는 정성적 평가방법에서 정량적 평가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정성적 평가방법에서 신뢰성, 타당성, 통합성 등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정아름 외, 2020). 정량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측정 척도 측면에서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방식과 등급, 점수 등 비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일형 외, 2021).

<표 1> 국내·외 사회적 성과 평가모형

평가 모형	측정 명	측정목적	측정방법	의의	한계
화폐 가치	SROI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포괄한 넓은 관점에서 성과평가하는 것을 목표	<u>사회적부가가치</u> 투자액	경영활동의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사회적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판단	이해관계자별 상이한 성과 측정
	SPC	사회적가치를 현금보상하여 사회적시장에서 시장의 가격기구 정상화, 시장실패 극복	사회성과 유형별 측정식	사회성과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측정	준거가격의 적합성, 신뢰성 문제
비화 폐가 치	IRIS +	사회적·환경적 임팩트 투자 의사결정에 신뢰성과 정보 제공을 목표	지표를 카탈로그화하여 지표를 선택, 구성	9개 섹터별 공통 지표 제시	섹터 간 비교 불가능
	BIA	모든 비즈니스에서 사람·환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성과 측정	질문세트 응답 및 점수 비교	다른 기업들과 점수 비교 가능	성과측정보다 측정 가능한 조직인가를 판단에 초점
	SVI	사회적 성과와 영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계량·비계량 측정 혼합, 종합점수로 등급 산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해,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 간소화하여 구성	다양한 사회적 성과 측정 어려움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사회적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과 사회성과 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SPC) 제도 등이 있다(라준영 외, 2018; 조일형 외, 2021). SROI는  $\frac{\text{순이익}}{\text{투자액}}$ 으로 계산하는 투자자본 수익률(ROI)을 활용하여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정아름 외, 2020). SROI는 순이익 대신, 사회적부가가치를 사용하여,  $\frac{\text{사회적부가가치}}{\text{투자액}}$ 으로 사회적가치를

계산한다(장승권 외, 2017). 이때 사회적부가가치는 ‘사회적편익 - 사회적비용’이다(장승권 외, 2017). 재무적 성과평가는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과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의거, 경제적가치와 더불어 사회적·환경적가치를 모두 포괄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장승권 외, 2017). 비재무적 가치를 화폐적 가치로 측정가능한 모형 중 하나이며,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이해관계자 별로 사회적이익을 계산한다(장승권 외, 2017). SROI는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처음으로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측정과정에 있어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별 결과가 상이하여 횡적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정아름 외, 2020; 장승권 외, 2017).

SPC는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금보상하는 제도다(라준영 외, 2018). 사회적가치 측정은 고용성과, 환경성과, 사회생태계성과, 사회서비스성과로 세분화하여 측정식에 따라 계산한다(라준영 외, 2017). 이해관계자 회계, 보수성의 원칙, 준거 시장 기준 가치 추정을 기본으로 한다(라준영 외, 2018). SPC는 어떠한 사회성과를 측정하고자 하고자 하는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화폐로 측정가능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라준영 외, 2017). 그러나, 측정식에 사용되는 준거가격(Proxy)의 적합성, 신뢰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준영 외, 2017).

등급이나 점수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은 IRIS+(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 BIA(B Impact Assessment), SVI(Social Value Index) 등이 있다(최은주·최우석, 2020; 조일형 외, 2021; 김재호, 2021). IRIS+는 임팩트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과정에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사업내용을 농업, 교육, 환경, 금융, 에너지 등 9개 섹터로 구분하여 각 섹터별 조직개요, 제품개요, 재무성과, 운영효과 등에 해당하는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Kelly McCarthy et al., 2019). 각 조직별로, 사업별로 적합한 지표를 선택·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고, 동종섹터 내 기업들과 비교가능하다(Kelly McCarthy et al., 2019). 그러나, 사업이 다른 섹터 외부의 기업들과는 섹터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BIA는 비콥인증평가도구이며 평가지표이다(MYSC, 2019). BIA 자가진단을 통해 80점 이상(200점 만점)을 획득한 기업은 사회적책임기업 인증 자격이 부여된다(MYSC, 2019). 고객, 환경, 지배구조, 지역사회, 기업구성원으로 영역별 질문세트를 가진다(MYSC, 2019). 모든 비즈니스에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전방위적 성과측정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MYSC, 2019). 공공의 유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표준



과 모델을 개발·확산한다는데 의의가 있다(MYSC, 2019). BIA는 다른 기업들과 점수비교가 용이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성과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인가를 평가하는 도구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다(MYSC, 2019).

SVI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개발하였다(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SVI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여 창출한 사회적 성과와 영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사회적 성과(60%), 경제적성과(30%), 혁신성과(10%)를 계량지표(65%)와 비계량지표(35%)로 측정하여, 종합점수를 등급제로 산출한다(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SVI는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 간소화하여 구성하였으나, 대상이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에 초점이 되어,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미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그 외에도,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BSC), 부가가치회계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모형이 있다. BSC는 화폐로 측정가능한 재무적관점과 점수로 측정하는 비재무적관점을 결합한 성과측정 모형이다. 이는 기존 재무재표가 가진 성과측정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김용덕·김은희, 2016; 임현묵 외, 2017). BSC는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총 4개의 지표로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한다. 부가가치회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부가가치를 통해 재무성과와 노동분배로 사회적 성과를 산출한다(최은주, 2019; 최은주·최우석, 2020). 생산성, 성장성, 분배성과를 사용하여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다(최은주·최우석, 2020).

위의 모형들과 달리, 본 논문의 사례 중에서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론을 기반으로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신창섭·박창길, 2013; 박우영 외, 2016; 백유성, 2019; 허광진 외, 2021). CSR은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이론으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신창섭·박창길, 2013). 그러나, 각 분석틀이 동기나 목적 이외에 성과가 창출되는 프로세스,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할 수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하위 성과지표를 개발, 분석하였다(신창섭·박창길, 2013).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논문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KCI 등재지에 게재된 협동조합 사회적 성과에 관한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기간을 2012년도로 정한 이유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이루고,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외에도 생협, 신협 등 개별법을 토대로 설립된 협동조합도 포함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연구로서 협동조합을 사례로 다루는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만을 다룬 연구는 제외하였고, 문헌연구도 1편 제외하였다.

해당 논문들은 KCI에서 검색하였다. 키워드는 '사회적가치', '협동조합', '측정', '사회적가치 측정' 등을 검색하여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측정방식과 하위구성요소에 대해 설명 또는 개발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적 성과 외에도 비재무적 성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측정하고 있는 모형도 추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총 16편이다.

#### 2. 분석기준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살피고자,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시기 및 분야, 사회적 성과 정의, 평가모형의 목적과 대상, 평가지표, 하위구성요소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연구시기는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KCI에 기재된 연도별 논문 수를 파악하였고, 연구분야는 연구가 기재된 학술지의 수를 파악하였다. 사회적 성과 정의는 각 논문에서 연구자마다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의를 분류하였다. 평가모형의 목적과 대상은 각 연구에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평가 대상을 분류하였다. 평가지표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항목을 분석하였다. 하위구성요소는 평가지표를 토대로 정량적, 정성적 지표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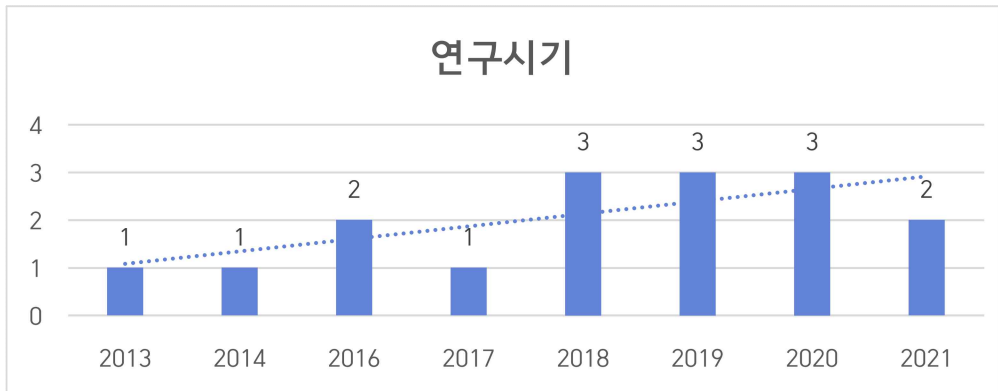
이에 따라, 연구문제는 ‘첫째, 협동조합 사회적 성과 연구는 언제, 어느 학술지에서 많이 이루어졌는가? 둘째, 각 연구마다 사회적 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셋째, 사

회적 성과 평가모형의 목적과 대상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넷째,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다섯째, 하위지표는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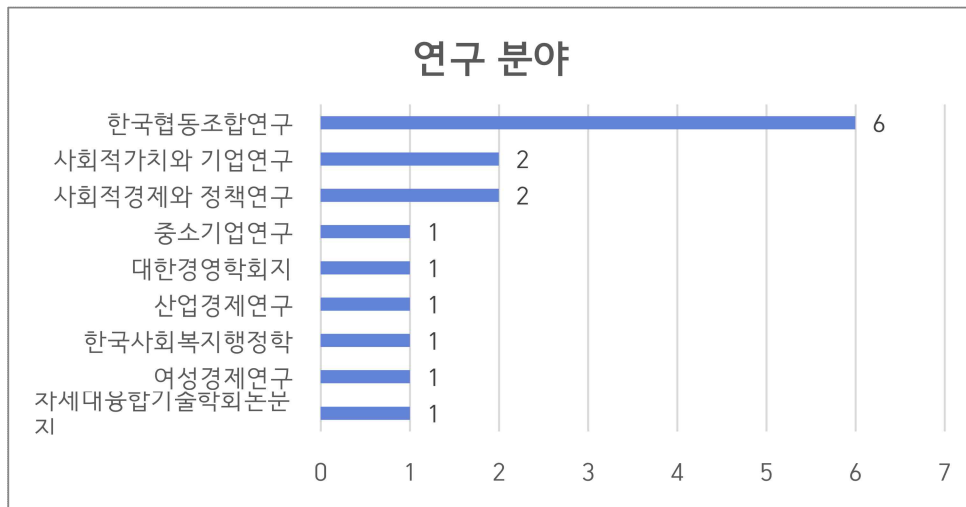
### 1. 협동조합 사회적 성과 연구시기 및 분야 현황

선정한 16편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연구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2012년 논문은 없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각 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 뒤로, 2016년에는 2편, 2017년에는 1편,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각 3편, 2021년에는 2편이 게재되었다. 2013년부터 사회적 성과 측정에 대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협동조합 연구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림 1>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연구 시기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에서 연구되었다. 한국협동조합연구 학술지에서 총 6편이 게재되었다.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에서 각 2편이 연구되었다. 중소기업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산업경제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여성경제연구,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에서 각 1편씩 연구되었다.



<그림 2> 협동조합 사회적 성과 연구 학술지 분야

## 2. 사회적 성과 정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사회적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각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과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Walzer(1983)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구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권리와 자유, 기회, 그리고 소득 등과 같은 가치들’로 정의하고 있다(정아름 외, 2020 재인용). EU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창출한 가치로, 좁게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의 사회적가치법에서는 기업을 포함한 조직 또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환경, 복지, 공동체, 사회자본 등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재정적·비재무적 영향으로 정의한다(정아름 외, 2020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연구에서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용덕·김은희(2016), 김새로미(2017), 김아영 외(2014)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토대로 이를 정의하고 있다. 김용덕·김은희(2016)은 ICA 협동조합 원칙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의 성과를 정의하였다. 협동조합의 사업체로서 성격과 결사체로서 성격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김새로미(2017)은 협동조합이 대안적 경제조직으로서 다른 영리기업과 구분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사회적 성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른 미션 달성 정도로 정의한다. 김아영 외(2014)는 사회적 성과를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기반

하여 정의하였다. 특히, 조합원 참여가 협동조합의 원칙에 높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라준영 외(2018)은 협동조합의 사회성과를 조직활동을 하는 결과물로 정의하였다.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때, 조합원의 필요와 욕망 등을 해결하고자 활동하기 때문이다. 사회성과는 재무성과와 같이 회계적인 개념으로 보아, 측정할 수 있는 성과로 보았다(라준영 외, 2018). 협동조합의 조직 활동은 조합원의 필요를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에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 원칙에 따른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신창섭·박창길(2013), 박우영 외(2016), 백유성(2019), 권영기·박상선(2020), 허광진 외(2021)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로 정의했다. CSR은 기업의 경영활동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사회적 가치와 이를 창출할 기대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권영기·박상선, 2020). CSR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에게 갖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성과는 CSR 이론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최은주(2019), 최은주·최우석(2020)는 사회적 성과를 주주에게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부가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협동조직에서 더 강조되는 부분으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소유자이자 이용자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사회·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최은주, 2019).

임현목 외(2018), 이재희·윤민화(2018), 최은주 외(2019), 유두호·엄영호(2020), 김재호(2021)는 사회적 성과를 사회문제 해결,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목적 추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조직이 창출한 사회·경제적 성과와 이러한 성과가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성과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이자,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다(유두호·엄영호, 2020). 협동조합의 이해관계를 보다 넓혀,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성과를 정의하였다.

&lt;표 2&gt; 사회적 성과 정의

연구자(연도)	사회적 성과 정의
김아영 외(2014), 김용덕·김은희(2016), 김새로미(2017)	협동조합 원칙
라준영 외(2018)	조직 활동의 결과물로서 사회적 가치
신창섭·박창길(2013), 박우영 외(2016), 백유성(2019), 권영기·박상선(2020), 허광진 외(2021)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은주(2019), 최은주·최우석(2020)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분배
임현목 외(2018), 이재희·윤민화(2018), 최은주 외(2019), 유두호·엄영호(2020), 김재호(2021)	사회문제 해결,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성과

### 3. 사회적 성과 평가모형

이 연구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평가에 있어, 각 연구자마다 어떠한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협동조합은 조합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인정받고 성과를 측정하기 보다, 사회적기업 또는 상법상 회사 등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받았다(김다솜, 2021). 이러한 인식은 협동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에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평가모형 개발의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김다솜, 2021).

본 연구에서 분석한 16편의 논문 중 김용덕·김은희(2016), 임현목 외(2018), 라준영 외(2018), 김재호(2021)는 기존에 개발된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김용덕·김은희(2016)와 임현목 외(2018)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BSC를 이용하여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복합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김용덕·김은희(2016)는 재무성과를 비재무성과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임현목 외(2018)는 비재무성과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라준영 외(2018)는 의료사협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SP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김재호(2021)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사례로 SVI의 신뢰도·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최은주(2019), 최은주·최우석(2020)은 부가가치라는 기존의 회계 이론을 이용하여 협동조합의 형태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최은주(2019)와 최은주·최우석(2020)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적합한 사회적 성과 측정과 분배를 목표로 하였다.

신창섭·박창길(2013), 박우영 외(2016), 백유성(2019), 권영기·박상선(2020), 허

광진 외(2021)은 기존에 개발된 모형이 아닌, CSR 이론을 기반으로 각 연구마다 정의하는 사회적 성과와 목적에 따라 모형을 개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신창섭·박창길(2013)은 CSR을 토대로 사회적 성과가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박우영 외(2016), 백유성(2019), 허광진 외(2021), 권영기·박상선(2020)은 사회적 성과가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김아영 외(2014), 김새로미(2017), 이재희·윤민화(2018), 최은주 외(2019), 유두호·엄영호(2020)도 기존에 개발된 측정 모형이 아닌, 이론·연구를 기반으로 모형을 제작·측정하였다. 주로 비계량적지표, 주관적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김아영 외(2014)는 아이쿱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로 구분하여 협동조합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재무성과를 제외하고 비재무성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재무성과는 영국협동조합 연합회(2009), 쿠리모토 아키라(2009)를 토대로 측정하였다. 김새로미(2017)는 Julie(1996)에 따라 협동조합의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성고용이 협동조합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4년 말 설립·등록된 개별협동조합을 전수조사하였다(김새로미, 2017). 이재희·윤민화(2018)는 전국 의료사협 5곳을 대상으로, 의료사협이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창출하는가를 파악하고자 연구하였다. 이해진(2017)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역주민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이재희·윤민화, 2018). 최은주 외(2019)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성과와 사회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무성과는 제외하였다. 유두호·엄영호(2020)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직의 내·외부 요인이 사회적가치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 RBV)에 따라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조직 내부 요인은 조직의 여유자원, 네트워크 등이며, 조직 외부 요인은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설정하였다(유두호·엄영호, 2020).

<표 3> 사회적 성과 평가모형

평가모형/ 연구자(연도)	설명	
	목적	지속적인 성장 발전 도모를 위한 성과평가 모델개발
BSC/ 김용덕·김은희(2016)	대상	협동조합
	연구방법	양적연구(2차자료)
BSC/ 임현목 외(2018)	목적	BSC를 통한 비재무적요인과 재무성과 간 인과관계

		분석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SPC/ 라준영 외(2018)	연구방법	양적연구(1차자료)
	목적	사회성과의 화폐가치화를 통한 비교가능성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구방법	양적연구(1차자료)
SVI/ 김재호(2021)	목적	사회적 성과에 관한 융합적 연구와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유형을 실증 검증을 통해 SVI의 효용성과 신뢰도 평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연구방법	양적연구(2차자료)
부가가치회계/ 최은주(2019)	목적	협동조합에 적합한 회계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탐색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구방법	양적연구(2차자료)
부가가치회계/ 최은주·최우석(2020)	목적	부가가치 관련 정보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분배성과(재무성과와 사회적 성과) 확인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연구방법	양적연구(2차자료)
CSR/ 신창섭·박창길(2013)	목적	사회성과가 발생하는 프로세스 분석
	대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이쿱)
	연구방법	질적연구(참여관찰)
CSR/ 박우영 외(2016)	목적	신협의 CSR이 신협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상	신용협동조합
	연구방법	양적연구(1차자료)
CSR/ 백유성(2019)	목적	CSR 인식, 조직신뢰, 고객-종업원 교환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
	대상	농업협동조합
	연구방법	양적연구(1차자료)
CSR/ 권영기·박상선(2020)	목적	생협 조합원이 생협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품질을 인식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생협 조합원의 관점에서 품질차원 규명
	대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구방법	질적연구(근거이론)
CSR/ 허광진 외(2021)	목적	생협 고유 특성을 반영한 제품품질, 서비스 품질, CSR 품질을 포함한 품질 모형 개발
	대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구방법	양적연구(1차자료)
영국협동조합 연합회(2009), 쿠리모토 아키라(2009)/ 김아영 외(2014)	목적	조직 내 성역할정체감이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이쿱)
	연구방법	양적연구(1차자료)
Julie(1996)/ 김새로미(2017)	목적	여성고용과 조직성과 상관관계 분석
	대상	협동조합
	연구방법	양적연구(2차자료)
이해진(2017)/ 이재희·윤민화(2018)	목적	전국 5곳의 의료사협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식 실증적 탐색을 통한 전략수립



최은주 외(2019)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구방법	질적연구(주제분석방법)
	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성과와 사회적 성과 체계적 분석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RBV/ 유두호·엄영호(2020)	연구방법	양적연구(2차자료)
	목적	조직 내부요인과 지방정부 역량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영향 요인 분석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연구방법	양적연구(2차자료)

#### 4.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이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영역과 하위지표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앞서 검토한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연구들에서 사용한 평가지표들을 문헌별로 정리하였다(<표 3> 참조). 각 연구는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7개까지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유형화된 평가모형을 사용한 연구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연구들은 영역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 각 연구의 하위지표들은 다양하고 혼재되어, 분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표 3>에는 연구자에 따른 평가모형, 평가영역과 하위지표를 나열하였다.

<표 4>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평가모형/ 연구자(연도)	하위지표	
BSC/ 김용덕·김은희(2016)	재무관점*	총매출액, 매출증가율, 비용절감액, 영업이익증가율
	고객관점	고객만족, 상품성, 서비스품질, 브랜드이미지
	내부프로세스관점	조합원증가율, 조직운영의 민주성, 자립화계획, 조합원과 관계유지
	학습과 성장관점	지속성, 의사소통,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이해도
BSC/ 임현목 외(2018)	재무관점	매출액 순이익률
	고객관점	고객만족도, 이미지, 사회공헌
	내부프로세스관점	의료서비스 품질, 조직운영의 투명성, 조직목표
	학습과 성장관점	직원 만족도, 교육훈련, 조직문화
SPC/ 라준영 외(2018)	서비스성과	서비스의 미보상 시장가치
	고용성과	근로소득 증대
	환경성과	환경오염 감소 및 정화, 신제품 자원소비 절감
	사회생태계성과	지역소득증대, 사회적 기업 성과 창출 기여, 사회문화적 자산 증대
SVI/ 김재호(2021)	조직미션	사회적미션, 사회적 경영 시스템 설립

	경영활동	주요 경영업무에서 사회적 가치, 사회경제적 생태계 구축,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조직경영	민주적 운영, 노동자 오리엔테이션
부가가치회계/ 최은주(2019)	부가가치보고서	산출된 부가가치와 분배된 부가가치
부가가치회계/ 최은주·최우석(2020)	생산성	부가가치율,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부가가치증가율
	분배성과	노동분배율, 1인당 노동분배율
CSR/ 신창섭·박창길(2013)	생협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식품안전, 농업지속, 독점 대항, 지역사회 기여, 직업으로서 운동에 대한 기대
	조합원에 의한 운영	자본출자, 운영장치, 조합원과 소통
	상호작용 전략과 실행과정	규모의 이중성:집중과 분화,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사업전략, 기여자 우선 문화
	사회적 성과 창출과 정의 결과	조합원 정서의 함양, 조합원 삶의 태도 변화, 정책에 대한 효능감, 생산자의 경제적 삶 향상, 평판 향상, 시중 물품 사양 향상, 지역사회투자자
CSR/ 박우영 외(2016)	공익사업	전통문화 재복원, 체육행사, 지역행사지원, 문화예술 및 단체행사, 문화 도서 발간
	기부협찬	현금, 제품, 공공요금, 재해구호, 청소년프로그램, 불우이웃 돕기 지원 기부
	자원봉사	의료활동, 재활서비스,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회복지시설 돕기, 재가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사회공헌	일관성, 상호공감성, 절차적 공정성, 접근 가능성
	이미지	합리적인 금융기관, 책임 있는 금융기관, 고객센터 서비스 수준이 높은 금융기관, 사회봉사활동에 힘쓰는 금융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금융기관
	브랜드	호감도, 충성도, 브랜드 이미지 증대 및 좋은 평판으로 인한 신흥브랜드 가치향상
	경영성과	신흥의 상품선택, 신흥의 금융상품추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신흥과 계속 거래 및 신흥에 대한 충성도 향상, 다른 고객에게 추천
CSR/ 백유성(2019)	사회적책임인식	조직과 연관된 사회문제의 해결에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인식
	조직신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그 조직을 적극 믿고 따르겠다는 의향
	고객 - 종업원 교환관계	고객과 종업원 간의 상호인정, 신뢰, 선호, 애착 관계
CSR/ 권영기·박상선(2020)	생산자와 파트너십	생산자와 소통, 생산자와 가깝게 느껴짐
	기업의 사회적 활동	윤리적 소비 운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환경에 대한 기여

CSR/ 허광진 외(2021)	경제적 책임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과 윤리적 규범 존중
	법적 책임	공정거래 질서와 관련 법규 성실히 준수
	윤리적 책임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
	재량적 책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환경적 책임	성실한 조세 신고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섬
영국협동조합 연합회(2009), 쿠리모토 아키라(2009)/ 김아영 외(2014)	비재무적 성과	조합원 참여율
Julie(1996)/ 김세로미 (2017)	기관장이 인식한 설립목적달성점수	여성인원비율, 여성근로자비율
이해진 (2017)/ 이재희·윤민화(2018)	사회적가치	연대, 자율, 민주, 협력
최은주 외(2019)	고용성과	직원증가현황, 정규직 비율, 취약계층 고용 비율, 남성/여성 비율
RBV/ 유두호, 엄영호(2020)	취약계층 고용인원	

각 연구마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때문에 <표 3>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하위지표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량적 지표는 객관적 수치로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지표에 해당한다. 정량적 지표는 다시 화폐가치와 비화폐가치로 나눌 수 있다. 정성적 지표는 점수나 등급, 또는 주관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한편,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지표들은 한가지 명칭으로 통일하였으며, 하위지표가 없는 모형은 제외하였다. 또한, 특수한 협동조합 또는 특정 맥락에서 발생 가능한 하위지표는 배제 또는 통합하였다.

#### 1) 정량적 지표

<표 5> 사회적 성과 정량적 지표

지표	하위지표
화폐가치	근로소득 증대, 서비스의 미보상 시장가치,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재무성과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증가율, 노동분배율, 매출액 증가율, 지역소득 증대, 사회문화적 자산 증대, 신제품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감소 및 정화
비화폐가치	조합원 증가율, 조합원 참여율, 직원 증가 현황, 취약계층 고용비율, 남/여 비율, 정규직 비율 등

분석한 16편의 논문 중, 사회적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측정하고 있는 논문은 총 4개이다. 이 중,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자료와 비화폐가치로 평가하는 논문은 각각 2개다. 화폐가치는 협동조합의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요인, 이해관계자 분배 등을 측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조직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경영성과를 얼마나 창출하였고, 이 성과가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었는가를 지표를 통해 확인하여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비화폐가치는 협동조합 조직 내·외부에 대한 기여로써 창출하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환경, 문화로까지 확장하였다. 조합원 증가율, 조합원 참여율, 직원 증가, 정규직 비율, 취약계층 고용비율, 남/여 고용 비율 등으로 특정하였다. 특히, 협동조합의 외부, 즉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고용성과를 통해 측정하는데, 협동조합의 역할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으로 본 경우이다.

## 2) 정성적 지표

<표 6> 사회적 성과 정성적 지표

협동조합 7원칙	항목		하위지표
기본가치	정체성		조직목표, 사회적미션, 주요 경영업무에서 사회적가치, 생산자의 경제적 삶 향상, 조합원 삶의 태도 변화
제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의사소통, 민주적 운영, 절차적 공정성
제 4원칙	자율과 독립		자립화 계획, 지속성, 사회적 경영시스템 설립, 자본출자
제 5원칙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과 관계유지, 사업 이해도, 교육훈련, 노동자 교육
제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사회경제적 생태계 구축,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직원 만족도	고객만족도, 직원만족도, 조직문화
		환경문제 해결 노력	환경에 대한 기여

정성적 지표들은 총 12개의 논문에서 리커트 척도에 의한 등급, 또는 점수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성적 지표에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하위지표들을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7원칙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를 정의할 때, 각 연구자들은 협동조합의 원칙, 조직의 사회적 책임, 가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은 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많은 만큼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분석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성과를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연관하여 분석하고, 이를 정성적 지표를 통해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조직목표, 사회적미션, 사회적가치 등을 사회적 성과로 측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제 2원칙(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에 해당하는 지표도 있다. 조직 운영의 민주성, 절차적 공정성 등을 통해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데 있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성과를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으로 보았다. 제 4원칙(자율과 독립)에 기반한 지표는 자립화 계획, 지속성, 사회적 경영시스템 설립, 자본출자로 측정하였는데, 이때 자본출자는 조합원의 주인의식에 의하여 출자하는가에 대해 정성적 지표로서 측정하였다(신창섭·박창길, 2013). 제 5원칙(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은 조합원과의 관계, 조합원 교육 등 교육훈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와 사업이해도과 같이 조직 정보제공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다. 협동조합이 다수에 의해 소유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중요시할 때, 조합원의 교육훈련 정도와 정보제공 정도 등은 협동조합의 성과측정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7원칙(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인 다양한 대상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 등과 직원만족도, 환경문제에 대한 기여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를 정성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지표들은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에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지표들은 주로 협동조합 조직 뿐 아니라 외부에 대한 기여 부분을 사회적 성과 지표로 강조하는 특성을 볼 수 있다.

## V.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한국의 협동조합 생태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그만큼 다양한 협동조합이 사회 전반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가는 확답할 수 없다. 협동조합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성과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재무적 성과를 모두 창출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성과도 측정되어야 한다. 즉, 협동조합이 창출하고 있는 성과를 파악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연구분야에서 사회적 성과가 어떠한 형태로 측정되어 왔는가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연구는 언제, 어느 학술지에서 많이 이루어졌는가?, 각 연구마다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사회적 성과 평가모형의 목적과 대상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는 무엇으로 구성하는가?, 하위지표는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5개의 연구질문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KCI를 기준으로 게재된 논문은 총 16편으로, 총 9개의 학술지에서 연구되었다. 대부분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연구되었다.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의는 각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으로 창출되는 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킴으로써 창출되는 성과,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 16개 사례 중 10개가 협동조합기본법을 기반으로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평가모형은 BSC, SPC, SVI, 부가가치회계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대부분 정량적 지표보다 정성적 지표를 더 많이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정성적 지표보다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연구 흐름과 차이가 있다. 각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과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정량적 지표로 개발된 모형들로 측정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2.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협동조합 사회적 성과 평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사회적 성과 평가모형과 지난 10년간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평가에 관한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둘째, 사회적 성과를 정의할 때, 협동조합 조직의 역할이 무엇이며,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 셋째, 협동조합의 유형,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창출

하는 사회적 성과가 다르고, 세분화하여 분석되었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는 공통의 영역과 조직의 특성에 따른 개별 영역에서 성과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성과 모형을 유형화하기에 KCI에 게재된 연구 자료가 양적으로 부족하였다. 둘째, 각 연구자가 연구 모형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자가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 성과가 이후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 분류함에 부족함이 있다. 셋째, 연구자마다 협동조합을 지원이 필요한 조직 또는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조직 등 다양한 견해를 드러냈는데, 이러한 요인이 성과 측정 모형을 선택·개발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측정 모형들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지 못하였다.

## 참 고 문 헌

- 권영기·박상선 (20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인식하는 새로운 품질차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38(3), 129-153.
- 김다숨 (2021), 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하는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한국협동조합연구, 39(2), 27-56.
- 김새로미 (2017), 협동조합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5(3), 29-48.
- 김아영, 최우석, 장승권 (20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회의 성역할 정체감, 지배구조, 그리고 경영성과, 여성경제연구, 11(1), 51-79.
- 김용덕, 김은희 (2016), BSC와 AHP를 활용한 협동조합 성과평가 모델: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사례 적용, 산업경제연구, 29(3), 1303-1323.
- 김재호 (2021),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유형과 사회적 성과에 대한 융합적 연구,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5(6), 1198-1207.
- 라준영, 김수진, 박성훈 (2018), 사회성과인센티브(SPC)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환산,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1(2), 133-161.
- 박우영, 박송춘, 김주환 (2016), 신용협동조합의 사회공헌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4(1), 47-75.
- 백유성 (2019), CSR인식, 조직신뢰, 고객-종업원 교환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 대한경영학회, 32(12), 2223-2240.
- 신창섭, 박창길 (20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창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1(2), 1-30.
- 이재희, 조상미, 권소일 (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연구동향분석: 2000년~2017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1(2), 183-236.
- 임현목, 서진선, 최우석 (2018),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비재무요인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BSC 기법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0(2), 61-92.
- 유두호, 엄영호 (2020),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영향요인 분석 : 조직 내부요인과 지방정부 역량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3), 59-92.
- 이재희, 윤민화 (2018),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일”의 방식: 그들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4), 239-273.
- 장종익 (202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에 관한 유형별 접근, 지역발전연구, 30(2), 77-107.
- 정아름, 허승준, 송기광, 김보영 (2020),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의 특징 분석 및 최신 동향, Korea Business Review, 24(3), 145-171.
- 조상미, 서민정, 임근혜, Kang, C. R. (2018), 사회적기업의 성과, 무엇으로 보는가? : 경향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 81-128.
- 조일형, 이미영, 김성재 (202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22(1), 1-18.
- 최은주 (2019), 협동조합 회계보고를 위한 부가가치보고서의 유용성, 한국협동조합연구,



37(1), 21-40.

최은주, 장지연, 장승권, 서진선 (2019), 한국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창출: 재무성과와 사회적 성과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4), 29-59.

최은주, 최우석 (2020),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 부가가치 정보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38(3), 51-75.

허광진, 이준겸, 박상선 (2021), 유통업의 제품, 서비스, CSR 통합 품질 모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3(4), 95-115.

김다솜 (2022), 협동조합의 성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성과평가에 대한 시간성 인식 분석,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2021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4&pg=1&board\\_code=BO04&category\\_id=CA01&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5097](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4&pg=1&board_code=BO04&category_id=CA01&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5097)

라준영, 김수진, 정소민, 박성훈 (2017),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적 성과 측정 매뉴얼.

엠와이소셜컴퍼니. (2019). B Impact Assessment.

<https://bcorporation.co.kr/B-Impact-Assessment>

장승권, 최우석, 박상선, 서재료, 최은주, 조수미, 최수인 (2017), 2016년도 주거복지사업의 성과모니터링과 효과적 추진방안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서, 쿠파협동조합.

Kelly McCarthy, Leticia Emme, Lissa Glasgo. (2019). IRIS+ CORE METRICS SETS.

<https://iris.thegiin.org/document/iris-core-metrics-sets/>

협동조합 설립현황. (2022년 6월 24일). COOP 협동조합,

[https://www.coop.go.kr/home/state/guildEstablish.do?menu\\_no=2032](https://www.coop.go.kr/home/state/guildEstablish.do?menu_no=2032)

##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연구동향: 2011 ~ 2022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윤석진\*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KCI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 학위논문에 게재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논문 19편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는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연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은 없었다.

둘째, 지방자치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째,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는 사례를 바탕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구와 군단위의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이 연구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다섯째, 정부가 설립하거나 종합지원형,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여섯째, 각 연구에서 제시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네 가지(필요성, 구체적 역할, 거버넌스, 전문성) 특징을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중간지원조직이 변화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동향

\*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 (kimkooyoon@naver.com)

# Research Trends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for Social Economy

– Focusing on the papers of Korean academic journals from 2011 to 2022

Yoon, Seok Ji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trends of research related to the social economy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19 papers related to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for social economy, published in KCI-registered journals, candidate journals, and degree papers from 2011 to 2022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related to the social economy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was continuously conducted except for a specific year, but there was no overall rapid increase.

Second, the most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fields of local autonomy and political science.

Third, research related to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was most frequently used for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hich seems to have been used to evaluate the role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considered by various stakeholders.

Fourth,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for basic local governments at the district and county levels were selected the most as the subject of the study.

Fifth, the most research was conducted on government-established type, comprehensive support type, and regional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ype.

Sixth,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role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presented in each study commonly presents four characteristics (need, specific role, governance, and expertise) over tim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various studies are needed to specifically analyze the changing cases of Kore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Key words :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Social economy, Research trends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Management of Co-operatives, Graduate School,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Korea, kimkooyoon@naver.com

## I. 서론

오늘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 인구 고령화, 빈부격차와 같이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꾸준한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소득 불평등 등 지역과 특정 인구특성 간 불평등이 사회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기존의 시장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도입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증대해 왔는데, 특히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에 걸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제도적 마련을 위한 논의들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존재하며 또 양적으로 엄청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을 중간에서 지원해주는 기관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은 주로 정부와 시민, 민간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 중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약 10년간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양적으로 엄청난 증가를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이들의 현재 역할과 기능, 한계에 대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근 중간지원조직과 연관된 연구에서는 당사자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중간지원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추후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생산하고 있다. 시장에 적합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해 시장 확대 부분과 역량 강화 영역을 제시하고, 사회적 경제 자금조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거나(주성수, 2017),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 조직이 직접 참여하여 민-센터-관이 함께 공존하는 협의체 혹은 인프라의 도입을 검토하는 결과를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양적으로 확장하는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분명했다. 하지만 최근 단순히 양적인 확대가 아닌 각 조직의 내실화, 네트워크 구축,

올바른 법체계 제정 등과 같이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난 11년간의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연구에서 사회적 경제 중간조직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의하고, 추후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방향성과 관련된 제언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일반적으로 각 나라에서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모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홍영숙, 2017).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는 각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특징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경제는 제 3섹터(third sector),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연대의 경제 등의 다양한 용어로도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포괄하여 사용되면서 세계 많은 나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장원봉, 2007). 사회적 경제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서 연구자 혹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서 정의된다. 아래 <표 1>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정의를 나열한 것인데, 공통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로 해석할 수 있다(신명호, 2009).

<표 1>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

구분	정의
Fallon(1934)	사회적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재화의 생산, 분배, 교환 그리고 소비를 관리하는 일반 법칙을 다루는 과학
Weber(1990)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제활동의 합리화와 그것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관찰을 포괄하는 개념
유럽경제공동체(1989)	공통의 욕망을 가진 시민들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기업조직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관계로서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개념
OECD(1999)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 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
Defourny(2004)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가 진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이윤보다는 서비스를 우선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과 수익 배분에서 사람과 노동을 중요시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조직의 영역
장원봉(2007)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갖고 폭 넓은 시민사회의 주동성과 그것의 결속들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호혜, 연대의 상호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

<자료: 장원봉(2007), 홍영숙(2017)에서 참고하여 표로 구성>

한국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정부와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부상하였다. 특히 정부는 시민 사회의 요구와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대안 모델로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전국화 되었고 이에 따라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활동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육성되면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경제가 본격화 되었다(홍영숙, 2017).

## 2.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공 및 시장실패 이후 제 3섹터인 NPO(Non Profit Organization)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직간의 조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중간단계의 지원조직을 지칭하면서 널리 확산되었다(이자성, 2018). 유럽 및 미국 등은 고용문제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3섹터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였고 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였는데 미국의 중간지원조직은 1800년대 후반에 기반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으로 불리며 등장했다. 1970년대 후반, NPO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각 조직의 회계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대폭 증가하였다. 영국은 중간지원조직을 산하조직(Umbrella Organization)으로 표기하였고 이후 이들을 VCS(Voluntary & community sector)라고 지칭하였다. 영국은

정부와 시민섹터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인재 육성, 자금조달, 전문가 연계 등 중간지원조직으로서 VCS를 지원하여 지역 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김재현 외, 2013).

이처럼,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공식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이석현, 2014) 한국에서는 과거 설치된 다양한 목적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최근 중간 지원조직의 활동 영역이나 역할, 필요성, 개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강권오·남윤섭, 2022).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박영순·정병순, 2019).

한국에서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의 사전적 개념은 정부와 지역 공동체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김민찬·남재걸, 2021). 사회적 경제 내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은 어떤 주체가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특정 활동이나 기능을 운영함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조직이며 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마상진, 2011). 지식경제부는 2018년 중간지원조직을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였다(재인용).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은 누가 설립하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사업방식 및 활동지역 범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표 2> 기준별 중간지원조직 유형

①설립/운영	②사업방식	③활동지역
공설공영(公設公營)	종합지원형	광역형
공설민영(公設民營)		
민설민영(民設民營)	특정분야 지원형	지역형

#### 1)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은 관주도형, 민간주도형, 민간위탁형 등 3개로 구분할 수 있다(표 2 참조).

첫째, 관주도형(이하 공설공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형이다. 공익성 증진의 목적에 적합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 시

책, 조례에 기초하여 정부 혹은 자치단체장 의견이 사업운영에 영향을 끼쳐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행정이 규정한 운영방식에 따르므로 제약이 많아 창의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

둘째, 민간주도형(이하 민설민영)은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유형이다. 행정기관의 간섭 없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유연성과 자율성이 장점이지만 재정안정의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사업(교육, 조사연구 등)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위탁형(이하 공설민영)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유형이다. 일정 부분 행정에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행정과 협동운영 체제로도 모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안정적 예산확보와 운영 노하우를 지닌 민간이 결합하여 운영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위탁을 준 기관의 의견이나 지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간주도형에 비해 사업유연성이 낮다(지식경제부, 2011:28-29; 마상진, 2011:12-13, 강내영, 2011).

<표 3> 강내영, 2011; 지식경제부, 2011; 재인용

	공설공영(관주도형)	공설민영(위탁형)	민설민영(민간주도형)
주체	정부(행정)	정부(행정)	민간단체
운영주체	정부(행정)	민간단체 (입찰 혹은 수의계약)	민간단체
사업자금	정부(행정)자금	정부(행정 혹은 지자체)자금	자체 자금
자유도	규제있으나 안정적	수탁단체의 능력, 전문성, 경제적 자립도는 교섭능력이 필요	불안정(자유로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자금</li> <li>● 운영의 연속성</li> <li>● 뚜렷한 목표성과 도출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운영의 유연성</li> <li>● 예산의 안정적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주체성</li> <li>● 사업운영의 유연성</li> <li>● 시민섹터의 높은 주체성</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시적 성과도출 필요</li> <li>● 기관장 의견 중요, 각종 규제 이행</li> <li>●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시적 성과도출 필요</li> <li>● 운영주체의 능력 중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확보의 어려움</li> <li>● 운영전반에 높은 전문지식 요구</li> </ul>
특징	사회적 신용 및 자금이	행정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안정적이나 행정주도형으로 운영되기 쉽고 특히 직원의 이동으로 책임성 문제로 인한 지원제로서 전문성 및 선구자적 성격을 기대하기 어려움.	경우가 많고, 사업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비, 조성금, 자체사업 등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주도의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시민공익활동을 추진해 의욕넘치는 거점 운영을 목표로 하나 높은 경영 능력 필요함.
--	--	---	--

## 2) 사업방식에 따른 유형

중간지원조직은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종합지원형 중간지원조직과 특정분야 지원형 중간지원조직으로 그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홍영숙, 2017).

종합지원형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사업 분야의 당사자 조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및 인재양성 등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기관은 교육, 자금지원, 판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지원 대상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활동 범위를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은 중앙정부 혹은 권역별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단체의 특성으로 적합하다.

특정분야 지원형 중간지원조직은 환경, 복지, 문화 등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기능을 진행하는 조직의 형태이다. 위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컨설팅, 인재양성, 회계 등 중간 지원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지원하는 형태도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은 종합지원형에 비해 전문성이 높아 성과의 도출에 강점을 갖는다.

## 3) 활동범위에 따른 유형

중간지원조직은 활동 범위에 따라서 광역형과 지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홍영숙, 2017). 광역형 중간지원조직은 전국 단위의 활동 혹은 광역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조직은 기초 단위의 중간지원조직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당사자 조직을 위한 매뉴얼과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여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재경, 2012). 또한 광역형 중간지원조직은 자치구 기반의 중간지원조직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설계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역형 조직은 직접 사회적 경제 조직을 상대하기보다는 기초형(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이 원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

이라고 할 수 있다(박세훈 외, 2014).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은 기초자치구나 그 이하의 영역에서 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과 접촉하여 사업 발굴,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박세훈 외, 2014). 지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사업 발굴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에 전체 사회적 경제 활동 영역이 성장하려면 지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는 사례가 확산되어야 한다(홍영숙, 2017).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논문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등재지에 게재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12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처음 설립되었다. 이후, 지자체, 민간단체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진흥원의 지원 대상이 협동조합까지 확대되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전반적인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연구 대상은 사회적 경제와 연관된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마을공동체 등이 포함된다.

해당 논문들은 KCI에서 검색을 진행하였으며 키워드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을 검색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기 시작한 지 약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KCI 등재연구가 적어 추가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KCI 등재후보지의 일부 연구들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총 19편이다. 논문 형태는 학위(박사)논문 1개, 국내 학술지 논문 18개로 구성되어 있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네 가지 측면

에서 문헌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연대별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이 정착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행되는 연구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봄을 통해 지난 11년간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의 추세를 확인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분야별 연구 동향이다. 2010년대 본격적으로 발전한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주도하에 설립된 기관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주로 어떤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세 번째는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이다. 정부, 당사자 조직(사회적 경제 조직), 중간지원기관 종사자 등 중간지원조직의 내외부적 환경과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네 번째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이 정착하고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각 연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제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그 변화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V. 연구동향

### 1. 중간지원조직 연구 연대별 분석

사회적 경제 분야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연대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9개의 선행연구를 아래의 <표 4>와 같이 연대의 흐름 순으로 분석해보았다.

<표 4> 중간지원조직 연구 연대별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논문 수	3	—	—	2	1	1	2	4	1	—	4	1
비율	16%	—	—	11%	5%	5%	11%	21%	5%	—	21%	5%

19개의 선행연구를 연대별로 분석하면,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논의가 이루어진 2011년에 3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사회적 경제 분야의 연구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은 없었다.

처음 연구가 진행된 2011년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권형(2011)은 인천시 남동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의 수립에 어떤 시사점과 정책과제가 있는지 제시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상진(2011)은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이들의 역량을 지원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당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법과 현황을 고찰하고, 농촌 사회적기업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국내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우수사례와 유럽 국가(벨기에, 영국, 스페인 등)의 중간지원조직 사례를 제시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엄형식,마상진(2011)은 마상진(2011)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 모델의 개발을 위해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농촌지역에 적합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사회적기업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처음 제정되고 논의되던 2011년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지역별, 유형별 중간지원조직이 생겨나면서 2014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현행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고광용(2014)은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우수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보다는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전담기관 배치를 통해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때부터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이유뿐만 아니라 현행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한계를 제시하며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김학실(2014)은 중간지원조직이 당사자 조직은 기대가 높은 것에 비해 말단 행정조직이라는 위치상 한계적인 역할만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며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오단이·정무성(2015)은 사회적 기업가들과의 FGI를 통해 현행 중간지원조직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2016년 이후부터는 중간지원조직의 협력관계, 이해관계 등 중간지원조직 외부의 환경과 연관된 연구가 시작된다. 김태영(2016)은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활동 혹은 역할 수행의 원인, 이슈, 문제점, 대응 등을 분석하여 중간지원조직이 활동

하며 역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김보람·최정민(2017)은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연구하여 유기적인 소통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홍영숙(2017, 학위논문)은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분석하여 4가지의 역할 유형별로 정리하며 지역사회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2018년에는 앞서 진행된 순차적인 연구 주제를 모두 포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정은·최영준(2018)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공공이 설립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연경·김태영(2018)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과정의 주요 쟁점을 분석했으며, 전지훈·홍은일(2018)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책 수요와 경제적 성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앞선 2011년 유럽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을 분석하였다면 이자성(2018)은 일본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후 2019년 연구부터는 중간지원조직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였다. 장인봉(2019)은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강현(2021)은 협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 간의 거버넌스 이해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더불어 김민찬·남재걸(2021)은 마을기업과 중간지원조직, 정부와의 거버넌스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안태욱(2021)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에서 협력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을 제시하는 등 중간지원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연구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이해관계자간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협력에 대한 강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인 윤모린·조상미(2022)는 중간지원조직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무성과에 대한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중간지원조직의 내부 환경에 대한 연구 또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약 12년의 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의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는 비록 양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인봉(2019)은 한국의 중간지원조직은 민간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의 의미로 이용되어져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필요성과 관련된 당위론과 성과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을 수밖에 없

었다고 말한다.

2015년 이전의 연구의 경우 장인봉(2019)의 말처럼 사회적 경제 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엄형식·마상진, 2011; 마상진, 2011; 이권형, 2011)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확대(김학실, 2014)를 주장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정부 중심으로 설립되는 중간지원조직은 자발성이 약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비판적 목소리 또한 등장하였다(고광용, 2014).

2016년도 이후부터의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현 상황을 다양한 외부환경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당사자 조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계점 등 중간지원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김보람·최정민, 2017; 최정은·최영준, 2018; 김민찬·남재걸, 2021)를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하여 중간지원조직이 더 이상 정부의 정책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당사자 조직이 운영하는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였고, 특정 창업단계만이 아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연대별 연구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에서 현재 중간지원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한계가 점점 부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사자 조직이 정부 주도의 중간지원조직의 한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는 연구가 2017년도 이후부터 증가하였기에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기관의 역할이 아닌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사회적 경제 분야 중간지원조직 연구 분야별 분석

사회적 경제 분야 중간지원조직 연구 분야별 현황은 <표 5>와 같다. 한구지방자치연구에서 총 3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했고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 연구를 진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에서 2편으로 그 다음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행정학, 정부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이 게재되었다. 특이한 점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학회에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혹은 한국협동조합연구 등 사회적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에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가 드물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중간지원조직이 한국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특히 장인봉(2019)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성격이 강하며, 실제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양적확대라는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당사자 조직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즉,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실질적으로 아직 본인의 본연한 역할을 갖추지 못했기에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보다 지방정부, 혹은 정부학연구와 같은 정부관련 연구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중간지원조직 연구 분야별 논문 현황

연구분야	논문수
한국지방자치연구	3
한국농촌경제연구	2
한국위기관리논집	1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
지역산업연구	1
정부학연구	1
융합사회와공공정책	1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1
사회과학연구	1
도시행정학보	1
국회입법조사처	1
국정관리연구	1
학위논문(박사)	1

### 3.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연구방법은 <표 6>과 같다. 질적 연구방법이 10개(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양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9개(47%)이다, 양

<표 6> 연구방법 별 논문 수

연구방법	논문 수	대상 중간지원조직	
양적연구	9개 (47%)	기초지자체(구,군) 중간지원조직*	3개 (33%)
		시 단위 중간지원조직	4개 (45%)
		중간지원조직 포괄	2개 (22%)

질적연구	10개 (53%)	기초지자체(구,군) 중간지원조직	6개 (60%)
		시 단위 중간지원조직	1개 (10%)
		중간지원조직 포괄	—
		해외 중간지원조직	3개 (30%)

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서 시 단위 중간지원조직이 4개(45%)로 가장 많았고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이 3개(33%), 시 단위 중간지원조직과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2개(22%)로 뒤를 이었다. 질적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이 6개(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시단위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는 1개(25%)이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조사를 사용한 연구의 경우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가 3개(50%)가 진행되었다. 또한 해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가 3건(50%) 진행되었다. 특이한 점은 양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와 다르게, 해외의 중간지원조직 사례와 관련한 연구 3개(50%)가 진행되었는데, 이 중 2건은 2011년에 진행된 연구(마상진, 2011;엄형식·마상진, 2011)로서 한국에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정착하기 전 해외사례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연구임을 알 수 있다.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서울시 성북구와 관련된 연구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사례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 중간지원조직 별 연구의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지자체(자치구, 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가 9개(47%)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는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에 올바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와 다양한 문제제기로 인해 최근에는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되어 증가하고 있다(홍영숙, 2017).

각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중간지원조직을 유형별로 정리해보자면 <표 7>과 같다. 양적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설립/운영방식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중

<표 7>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연구현황

구분		양적연구	질적연구
①설립/운영	공설공영	3 (33%)	2 (20%)

\* 본 연구에서 기초지자체는 시 단위 이하의 자치구, 군에 해당함.



	공설민영	1 (11%)	3 (30%)
	민설민영	-	1 (10%)
	기타(포괄)	5 (56%)	4 (40%)
	총합	9 (100%)	10 (100%)
②사업방식	종합지원형	4 (44%)	3 (30%)
	특정분야 지원형	2 (22%)	3 (30%)
	기타(포괄)	3 (33%)	4 (40%)
	총합	9 (100%)	10 (100%)
③활동지역	광역형	4 (44%)	1 (10%)
	지역형	4 (44%)	5 (50%)
	기타(포괄)	1 (11%)	4 (40%)
	총합	9 (100%)	10 (100%)

공설공영, 공설민영을 함께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5개(56%)로 제일 많았고 정부가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설공영이 3개(33%)로 뒤를 이었다. 민간이 설립한 조직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민간이 위탁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은 1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질적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의 경우는 공설공영 2건(20%), 공설민영 3건(30%), 민설민영 1건(10%), 혼합형이 4건(40%)으로 양적 연구 방법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중간지원조직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민간이 설립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많은 수의 중간지원조직이 한국의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의 정책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경우가 많아 가장 많은 수가 공설공영 혹은 공설민영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공설공영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에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사업과 같이 민간이 직접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연경 외(2018)는 중간지원조직은 당사자의 필요를 해소 시키고자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에 근거해서 민간 주도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며 단순히 보조금 사업화의 측면에서 중간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닌 본래의 의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을 사업방식에 따라 구분하자면,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종합지원형이 4개(44%)로 가장 많았다. 특정 분야만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은 2건(22%), 종합지원형과 특정 분야 지원형 중간지원조직을 포괄하여 조사한 연구가 3건(33%) 진행되었다. 특정 분야 지원형 중간지원조직과 관

련된 연구에서는 마을기업만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지원센터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2건)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의 경우 종합지원형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가 3건(30%) 진행되었다. 특정 분야 지원형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는 3건(30%), 종합지원형과 특정 분야 지원형 중간지원조직을 포괄하여 진행한 연구가 4건(40%) 진행되었다.

양적 연구의 경우 종합지원형 중간지원조직과 연관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는 모두 2018년 이후에 진행되었다(김강현, 2021;강권오 외, 2021;장인봉, 2019;전지훈 외, 2018). 4건의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중간지원조직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진행하여 현행 정부가 설립한 종합지원형 중간지원조직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김강현(2021)은 중간지원조직이 협동조합의 제도개선을 위한 단일 창구 역할이 미흡하다고 제시했으며 기능분화와 전문성을 발전시켜 발전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이 지자체와 당사자 조직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창구로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권오(2021)는 중간지원조직이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현장성을 발전시키고 ‘중개’의 기능으로서의 발전을 촉구하였다. 장인봉(2019) 또한 의사소통 채널로서 종합지원형 중간지원조직이 미흡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양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며 종합지원형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이해관계자가 생각하는 해당 중간지원조직의 한계를 말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질적연구의 경우 종합지원형 기관과 특정 분야 지원형 기관을 모두 대상으로 진행한 포괄적 연구가 4개로 가장 많다. 이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 유형의 해외 사례 연구의 특성과 유사하게 공통적으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한 3개의 연구(이자성, 2018;엄형식 외, 2011;마상진, 2011)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해당되는 연구는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각 국가의 중간지원조직의 형태가 모두 상이한 특징이 있고, 이에 특정 사업방식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활동 지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으로 나뉘서 연구를 살펴보자면 양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광역형 조직과 지역형 조직을 각 4건(44%) 조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포괄한 연구는 1건(11%) 진행되었다. 질적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의 경우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을 연구한 논문이 5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형 중간지원조직 연구가 1건(10%), 광역형과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을 모두 포함한 연구가 4건(40%)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에 대한 분석

중간지원조직은 국가나 지역, 이해관계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는 역할 진행하게 되며, 따라서 역할 혹은 기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강권오 외,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연구한 논문에서 개념과 역할을 어떻게 개념화하였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다음 <표 8>은 연구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개념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기 시작한 2011년도의 연구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자면 이권형(2011)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의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관의 파트너십을 수립하기 위한 지원기관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제도가 도입 단계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착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지속적인 물적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엄형식 외(2011)는 중간지원조직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면서(사회적 역할),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경제적 역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사회정치적 역할) 다중적인 역할을 보유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마상진(2011)은 유럽 국가들의 중간지원조직 사례를 제시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은 공공 부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제와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2011년의 연구를 살펴보자면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따라서 연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시하기보다 정부가 당사자 조직에게 자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중간지원조직을 민관 지원체계의 연결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점적이다.

2014년 연구부터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역할에 대해 제시한 연구가 등장한다. 고광용(2014)은 중간지원조직은 중개자, 조정자, 역할구축자의 역할을

하며 공동체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는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직접적인 역할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두 개의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비교하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개자, 조정자, 역할구축자라는 역할 정의는 추후 다양한 연구(오단이·정무성, 2015; 홍영숙, 2017; 장인봉, 2019 등)에서 활용되었다. 김학실(2014)은 중간지원조직을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의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는 조직으로서 네트워크 구축, 역량 강화, 운영지원, 정책 연계, 시장 확대 등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이나 당위적 역할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제시하며 당사자 조직의 의사가 반영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당사자가 생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나열하며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기대가 높지만 실제 중간지원조직은 행정 분야의 말단조직으로 위치하여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 방향에 대한 정보의 전달과 인증지원 정도의 역할에만 국한되어 운영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오단이·정무성(2015)의 연구에서도 이해관계자가 느끼는 중간지원조직의 현실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당사자 조직을 위해 중개자, 조정자, 역할구축자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오단이·정무성(2015)은 현행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비판하며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정부주도형 중간지원조직보다 민간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당시 중간지원조직이 인증역할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관리대행자 역할로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며 정부차원, 광역차원, 민간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이 구분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태영(2016)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과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장과 지속성을 위한 지원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당사자 조직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바라본 것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이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서(under what conditions) 달라질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가 중요하다고 제시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특성(공설민영의 경우 민간시민단체의 특성)과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제시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4개의 연구를 살펴보면 앞선 2011년의 연구와는 달리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 역할을 제시하는 연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사자 조직이 기대하고 고려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현행 역할을 비교하며 추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활동가와 지자체장 등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들이 생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고려하는 등 기존 연구에서 진행되던 당위적 역할을 규정하는 과정을 지나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2017년부터의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보람 외 (2017)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쌍방향 혹은 다자적 관계에서 다른 조직들을 상호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조직이며 중간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거버넌스적 특성을 지닌 조직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전달 수단으로서의 조직이 아닌 당사자 조직과 이해관계자가 소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자성(2018)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협력 효과, 사회자본의 형성 등 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의 중심적인 존재인 것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창구가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기대하는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연경(2018)은 중간지원조직이 둘 이상의 주체 또는 조직 사이에 위치하여 서로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을 통해 각 지원체계 내에서 공통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인봉(2019)은 고광용(2014)이 제시한 세부적인 역할의 바탕이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장인봉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중개자, 조정자, 역량구축자 역할을 수행하여 당사자 조직의 발전을 돕는 조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2017년부터 2019년의 연구를 찾아보면 구체적인 역할과 더불어 올바른 역할의 수립과 진행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네트워크 이해관계자들 간의 올바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부주도하에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2014년 연구에서 지목되었던 현장의 기대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021년도 이후의 연구에서의 역할 정의를 살펴보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 전문성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태욱(2021)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의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지원,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지원, 정책연계, 전문성 등을 갖춘 역할로 규정하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강현(2021)은 사회적 경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며 이를 전문적·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앞선 연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현장 조직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단계별 교육 혹은 판로지원 등과 같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역할이 제시되었다. 강권오 외(2021)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생존 및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도 이후 연구의 경우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또 사회적 경제 교육을 진행할 만한 수단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현장 조직에서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행정기구의 최하위 위치에 있기때문에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인력교육, 플랫폼 확보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해결해야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각 연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할에 대한 하위요소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이 제정되고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유수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생태계 내에서 정착함으로써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각 연구의 역할 정의에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8> 중간지원조직 역할정의

연구	중간지원조직 역할 개념 정의
이권형 (2011)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관의 파트너십을 수립하기 위한 지원기관.
엄형식 외 (2011)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면서(사회적 역할),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경제적 역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사회정치적 역할) 다중적인 역할을 보유하는 조직.
마상진 (2011)	공공 부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제와 사회적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

고광용 (2014)	중간지원조직은 중개자, 조정자, 역량구축자의 역할을 하며 공동체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는 조직.
김학실 (2014)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의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는 조직으로서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운영지원, 정책연계, 시장확대 등을 지원하는 조직.
오단아·정무성 (2015)	중간지원조직은 당사자 조직을 위해 중개자, 조정자, 역량구축자의 역할을 하는 조직.
김태영 (2016)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과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장과 지속성을 위한 지원조직.
홍영숙 (2017)	지역을 기반으로 행정과 시민, 사회적 경제조직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개자, 조정자, 역량구축자 및 참여 주체들의 역량 지원 및 강화를 진행하는 촉진자로서의 조직.
김보람 외 (2017)	중간지원조직은 쌍방향 혹은 다자적 관계에서 다른 조직들을 상호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조직이며 중간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거버넌스적 특성을 지닌 조직.
이자성 (2018)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협력 효과, 사회자본의 형성 등 사회전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의 중심적인 존재.
정연경 외 (2018)	둘 이상의 주체 또는 조직 사이에 위치하여 서로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중재하는 기관.
최정은 외 (2018)	공공과의 관계와 기업, 민간과의 네트워크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밀거름.
전지훈 외 (2018)	정부의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전달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성과도출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
장인봉 (2019)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중개자, 조정자, 역량구축자 역할을 진행하여 당사자 조직의 발전을 돕는 조직.

안태욱 (2021)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지원,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지원, 정책연계, 전문성 등을 갖춘 조직.
김강현 (2021)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며 이를 전문적·행정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조직.
강권오 외 (2021)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생존 및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조직.
김민찬 외 (2021)	정부와 지역공동체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으로서 정보 제공, 발굴 및 육성, 공동체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조직.
윤모린 외 (2022)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조직과의 연결과 효율적인 정책 전달을 위해 설립된 조직.

## VI.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한국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대안 모델로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전국화되었고 이에 따라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시민 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이러한 조직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양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당사자 조직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편적인 지원프로그램과 행정기관과의 관계, 재무적 안정성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에서 지원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바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사



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언제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어느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연구 방법과 연구에 대상이 된 중간지원조직은 어디인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무엇으로 구성하는가?’라는 4가지의 연구 문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KCI 등재지의 연구와 등재 후보지,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논문을 분석하였고, 대상 논문은 총 10개의 학술지(학위논문 미포함)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는 11년간 전체적인 사회적 경제 분야의 연구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은 없었다. 또한 관련된 연구는 지방자치연구와 정책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에서 정부 주도로 설립된 경우가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의 방법론은 양적방법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사례조사, 질적연구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이후 당사자 조직과 이해관계자가 생각하는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기에 양적방법론이 가장 많았고, 사례조사의 경우 2011년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구의 대상이 된 중간지원조직은 구와 군 단위의 기초지자체인 경우가 9개로 가장 많았고, 시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해외 중간지원조직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간지원조직의 유형별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부가 설립한 유형의 단체와 종합지원형,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유형의 조직을 포괄하여 진행된 연구가 많아 정확한 비율을 계산할 수 없었다. 다만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의 측면에서 분류하였을 때 민간이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을 다루는 연구는 단 1편으로 확인된다. 이는 민간이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이 많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제시된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개념 분석연구에서는 4가지의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시행 초기에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역할 개념이 주를 이뤘다. 특히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서 제시되었다. 이후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는 연구의 흐름이 등장하였고 중개자, 조정자, 역량구축자라는 고광용(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주로 등장하였다. 다음 흐름으로는 앞선 흐름에서 제시되었던 역할에 더해 중간지원조직과 이해관계자간의 올바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개념의 흐름이 등장하였다. 특히 일방적인 지원체계가 아닌 당사자 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민간 위탁운영을 강조하는

연구가 증가하였고, 올바른 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 흐름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이 담당하는 역할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현장 당사자 조직들이 시간이 흐르며 설립기 단계를 벗어난 후보다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단계별 지원 역할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판로지원, 컨설팅 등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은 19개로 대상 연구의 수가 적고 논문 검색 과정에서 누락된 논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현행 한국의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한계가 현장 중심의 지원업무와 관련된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등 중간지원조직이 한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에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주도적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중간지원조직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영역 활동가의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강권오, 남윤섭(2022),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NGO연구, 17.1, 147-177.
- 고광용(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26.2, 131-159.
- 김강현(2021), IPA 방법론을 활용한 지자체 중간지원조직과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구축연구, 입법과 정책, 13.2, 5-34.
- 김민찬, 남재걸(2021), 지역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 및 정부와의 갈등 분석,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3, 3-33.
- 김보람, 최정민(2017),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 연구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2.3, 1-32.
- 김종걸(2016), 한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생존 조건, 생협평론, 37, 41-72.
- 김태영(2016),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정부학연구, 22.2, 81-125.
- 김학실(2014),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한 사회적 경제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0.7, 75-97.
- 마상진(2011),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25.
- 송두범(2021), 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56, 31-39.
- 안태욱(2021),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성조직 역할 중요도 연구: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4.2, 63-85.
- 엄형식, 마상진, 이동필(2011),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1-120.
- 오단이, 정무승(2015),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한 사회적기업가가 바라본 한국 중간지원조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189-212.
- 윤모린, 조상미(2022), 한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인식이 직무성파에 미치는 영향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2.1, 59-94.
- 이권형(201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 지원체제에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3.3, 45-63.
- 이자성(2018), 일본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 특징 및 시사점, 지역산업연구, 41.4, 71-96.
- 장인봉(2019),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1.3, 141-164.
- 전지훈, 홍은일(2018),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수요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간지원조직 협력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77-202.
- 정연경, 김태영(2018),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정의 쟁점과 과제, 도시행정학보, 31.3, 127-152.
- 최정은, 최영준(2019),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2, 271-295.
- 홍영숙(2017),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공정무역 국내 연구 동향: 2007년 ~ 2022년 국내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을 중심으로

최혜연\*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공정무역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공정무역 관련 논문 78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1. 시기에 따른 공정무역연구에 따른 논문 수를 파악하고, 2. 각 논문에서 다루는 공정무역 연구의 주제를 분석하고 3. 한국 공정무역 연구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4. 앞으로 한국 공정무역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공정무역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7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초창기의 연구 논문들은 주로 윤리적소비로서의 공정무역을 다루고 있었으며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구매행동 및 태도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후 장승권 김선화 등에 의해 지역과 조직기반으로 분석한 공정무역 연구들이 등장하였지만, 변화하는 공정무역필드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정무역의 국내 공정무역 이루어진 연구 현황에 대한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공정무역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어: 공정무역, 문헌연구

\*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디렉터 (winywina@gmail.com)

## Fairtrade Domestic Research Trends: Focusing on papers listed in Korean journals (Korea Research Foundation) from 2007 to 2022

Choi Hyeyeon\*

###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rends in Korean FairTrade research. To this end, 78 Fair Trade related papers published in domestically listed journals were analyzed from 2007 to 2022.

Research is 1. Identify the number of papers according to Fair Trade research according to the timing, 2. Analyze the topics of Fair Trade research covered in each paper and 3. Learn about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Fair Trade research 4. In the future, we have proposed the direction of Korean Fair Trade research.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can be seen that domestic research on Fair Trade has been studied in various fields since 2007. Early research papers dealt primarily with Fair Trade as ethical consumption, and there were many studies on consumers' purchasing intentions, purchasing behaviors, and attitudes toward Fair Trade products.

Since then, Fair Trade studies analyzed on a regional and organizational basis have emerged by Seungkwon Jang and Sunhwa Kim, but various studies are needed to analyze the changing Fair Trade fields.

Key words : Fair Trade , Literature study

## I. 서론

공정무역(Fair Trade)은 1940년대 후반 미국과 북미의 NGO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지역의 빈곤한 생산자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시작되었다. 초기의 공정무역은 시장에서 소외된 소규모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s, 이하 FTO), 개발협력단체 등의 비영리단체 들에 의해 발전하였다. (장승권, 2021)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무역제품에 마크를 붙이며, 다국적기업과 유통업체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할수 있게되면서 시장 주류화(mainstreaming)가 될수 있었다. 하지만 몇몇의 의식있는 소비자들의 소비로 확산되는 공정무역은 한계가 있었으며 2003년 영국의 가스탕에서 시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학교, 대학, 종교기관 등의 공정무역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공정무역마을운동에 세계 3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Fair Trade Towns International)

한국의 공정무역운동은 2002년 아름다운가게에서 공정무역 수공예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정지현 2020). 2017년 기준, 한국 공정무역 시장의 규모는 약 500억 원이며, 그 중 약 40%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차지하고 있다(iCOOP, 2018). 국내 공정무역운동은 약 20여 년간 글로벌 공정무역운동의 흐름을 따라 빠르게 새로운 실천과 개념들을 도입하며 발전하였다. 국내 공정무역 연구의 분석을 통해 한국 공정무역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국내의 공정무역에 대한 연구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나 구매의도에 대한 연구(민대기 외, 2012; 유소이 2012; 홍성현2012; 김영신 2015; 김해원 2015)가 주를 이루며, 대안무역 정책으로서 공정무역의 법경제학적 고찰 (김중호 2012), 공정무역 비즈니스에 참여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공정무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서정희, 2011), 청소년의 윤리적소비 및 세계시민교육 (최경숙 2015; 김병연 박선미2013; 최정숙2009), 특정 FTO들의 공정무역 실천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선화, 장승권, 2018; 김선화, 신효진, 2021), 필리핀 또는 베트남과 같은 공정무역 생산지의 연구(김선화, 장승권, 2019; 김선화 외, 2018), 한국에서 공정

무역마을운동 제도 생성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김선화, 장승권, 2020) 등이 있지만, 한국 공정무역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장승권 외, 2016).

최근 한국에는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교육과 캠페인을 확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으며, 공정무역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연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최근의 공정무역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정무역의 국내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정무역 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정무역

공정무역은 저개발국가의 생산품에 정당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저개발국가 생산자들에게 노동환경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자립을 돕는 무역이다. 공정무역은 대화·투명성 그리고 존중에 기초한 무역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국제무역에서 평등을 추구하고,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무역조건을 제시하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FINE2001)

초창기의 공정무역은 1946년 후반 미국과 북미의 NGO를 중심으로 저개발국가 생산자들의 빈곤 해결을 돕기위해 시작되었다. 공정무역은 원조가 아닌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관행무역의 한계를 비판하며 생산자와 직거래를 시도하는 대안무역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공정무역운동은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로 확산되었으며 공정무역인증이 도입되며 시장에서의 주류화를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기존의 공정무역은 개인화된 소비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장승권 2017) 제품을 매개로 윤리적 소비의 방식의 운동이 공정무역의 의미 전달에 한계가 있었으며 공정무역 마을운동은 기존방식과 다르게 공정무역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가 공정무역을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켜가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2000년에 영국 가스탕에서 시작된 공저무역운동은 유럽, 북미, 아시아 등으로 확산되며 세계 2079개의 도시와 마을이 공정무역마을이 있다.



### III. 연구방법

어떤 분야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 주제 영역의 출판물들이기 때문에(Muncy, 1991, p. 1 참조), 특정 영역의 지식의 동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분야에서 출판된 논문들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Muncy, 1991, Yale and Gilly, 1988 등). 특히 학술지의 논문들 분석을 통해서 그 분야의 연구 경향을 정리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 연구대상 논문

본 연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등재지에 게재된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공정무역 연구 논문은 2007년도를 시작으로 게재되었으며 KCI 등재된 논문중 ‘공정무역’을 키워드로 한 논문중 불공정, 국제무역등 초록과 내용에 공정무역의 내용이 없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총 78편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 처음 공정무역 제품이 판매된 2002년부터 2022년까지를 기준으로 연구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분석대상 논문 검색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이루어졌다. KCI상세 검색에서 제목과 키워드, 초록에 ‘공정무역’을 입력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공정무역을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은 2000년부터 있었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논문은 KCI등재 학술지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검색된 총 112편의 논문 중에서 중복대상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논문의 키워드에서 ‘공정무역’의 용어를 명확히 제시한 논문만을 선별하였다. 따라서 논문의 본문에서만 공정무역 대해 언급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무역을 주제로 다루는 내용 가운데 불공정 무역에 대해 기술하고 공정무역의 정의정도만 다룬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공정무역을 직접적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키워드나 초록에 공정무역이 포함된 연구라고 하더라도, 해당 논문이 공정무역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

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또한 공정무역을 다루고 있더라도 법학과 국제 정치연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공정무역을 키워드였지만, 논문의 내용이 ‘통상정책 측면에서 공정무역’을 다루었기에 본 논문의 이론적배경의 공정무역과는 다른 내용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셋째, 한글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논문과 국내 연구자의 논문이지만 영어로 쓰여진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상의 기준으로 2007년에서 2022년까지 발표된 총 78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확정하였다.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동향 하위 분석 영역과 준거를 도출하기 위해, 협동조합이나 교육학 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염찬희. 2015, 최선주.2019)을 참고하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한 영역을 기준을 설정하였다. (1) 연도별 논문 편수, (2) 연구자, (3) 연구주제/대상 (4) 연구방법이다. 이 4가지 주요 분석 영역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분석 근거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논문의 총편수를 연도별로 살펴본 후, 공정무역에 대한 연구의 횟수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시기에 공정무역 생태계에 요인을 찾아보았다.

둘째, 연구자와 관련하여, 저자별 발표 논문 수, 주요 논문 게재 학술지를 분석하여 연구자 분포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논문의 내용을 키워드로, 연구 대상으로 분류하여 어떤 주제로 어떤 대상을 연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 방법으로 질적연구, 양적연구, 문헌연구로 구분하여 어떤 방법론이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

\* 라공우(2010)의 <중국의 불공정무역 조사제도 현황과 운용에 관한 연구>의 경우 공정무역의 내용이 아니라 삭제함.

\*\* 박종은(2017), 김민재(2021) 진시원(2011)

&lt;표 1&gt; 주제 분석틀

분석영역	분석준거
논문 수	연도별 발표 논문 수
연구자	연구자별 논문 편수 주요 게재 학술지
연구주제	키워드
연구방법	질적연구 양적연구 문헌연구

##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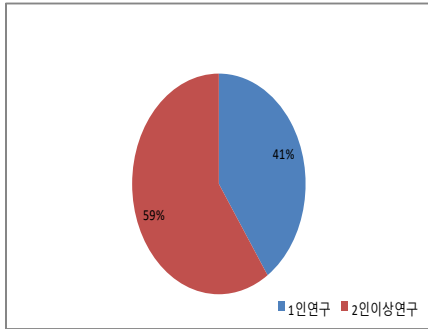
### 1. 공정무역 연도별 논문 편수와 연구형태

#### 1) 연도별 논문 편수

선정한 78편의 공정무역 연구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국내 공정무역이 처음 도입되었던 2002년의 논문은 없고, 2007년부터 게재되었으며, 2013년 8편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 12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2017년 이후 공정무역 연구논문의 수는 급격히 줄었으며, 2021년엔 1편의 논문만이 게재되었다. 공정무역 논문은 연평균 5.2편이 학술지에 등재되었다.

#### 2) 연구참여자수

논문의 저자수를 살펴보면, 2007년에 게재된 논문들을 포함하여 1인연구 32편이 있었으며, 2인이상의 공동연구 46편의 연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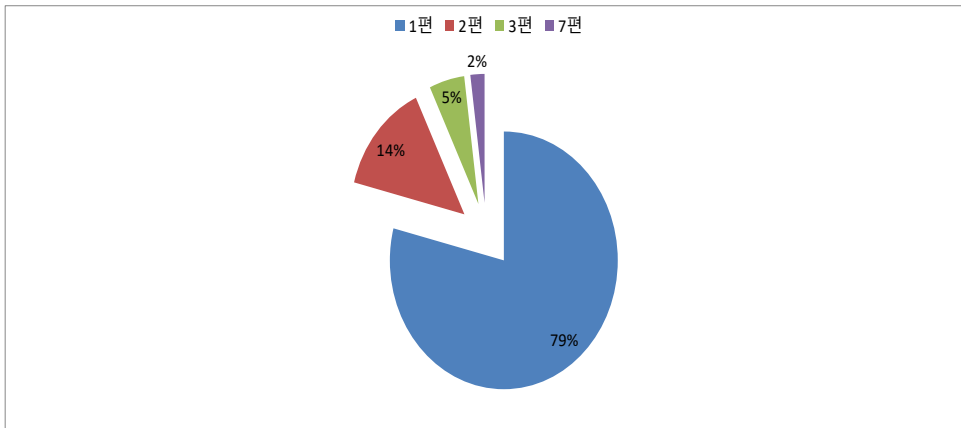
<표 2> 연구참여자수

	1인	2인 이상
빈도 (회)	32	46
비율 (%)	41%	59%

<그림 2> 연구참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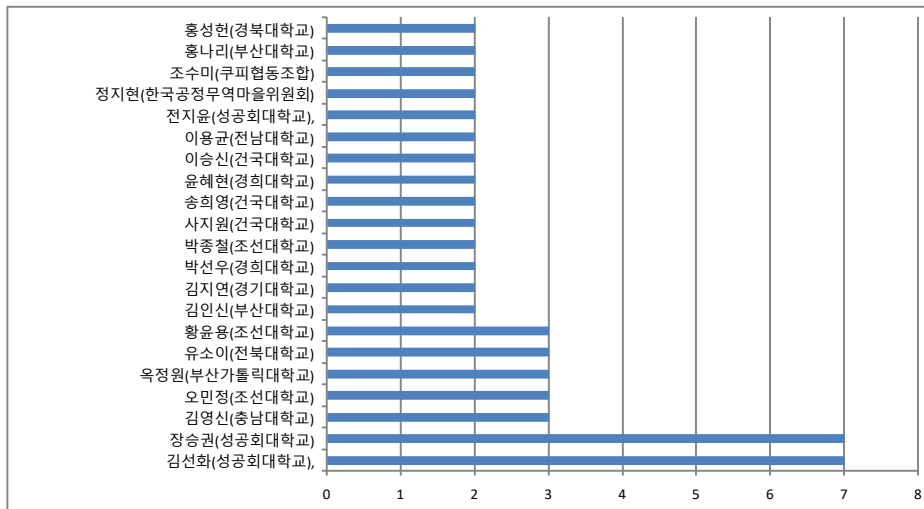
## 2. 공정무역 연구자 특성

### 1) 연구자별 논문 수



[그림 3] 연구자별 논문수

분석대상 논문 78편의 저자는 총 100명으로 그 중 논문을 1편만 발표한 비율이 79%로 높게 나타났다.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14명 (14%)이며, 3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은 경영학과 소비자경제학과 마케팅을 전공하였다. 7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는 김선화 장승권으로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에서 다수의 공정무역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그림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연구자별 논문수

연구자의 연구동향을 보기 위해 3편이상 공정무역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의 최근 공정무역 관련 연구를 보면 김영신은 2016a, 2016b, 2017에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주로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유소이는 2011, 2012a, 2012b에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황윤용과 오민정은 2014, 2013, 2012 소비자의 정체성과 구매의도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유통마케팅분야의 다수 논문을 발표한 옥정원은 2015, 2015, 2018은 소비자의 지각된 시장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행동 사이의 갭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최근까지 논문을 발표한 김선화 2016, 2018a, 2018b, 2019, 2021, 2022a, 2022b, 장승권 2016a, 2016b 2018a, 2018b, 2019, 2021, 2022은 한국의 공정무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국 공정무역 분야에 관여하는 조직과 연대하는 생산자의 사례를 중심으로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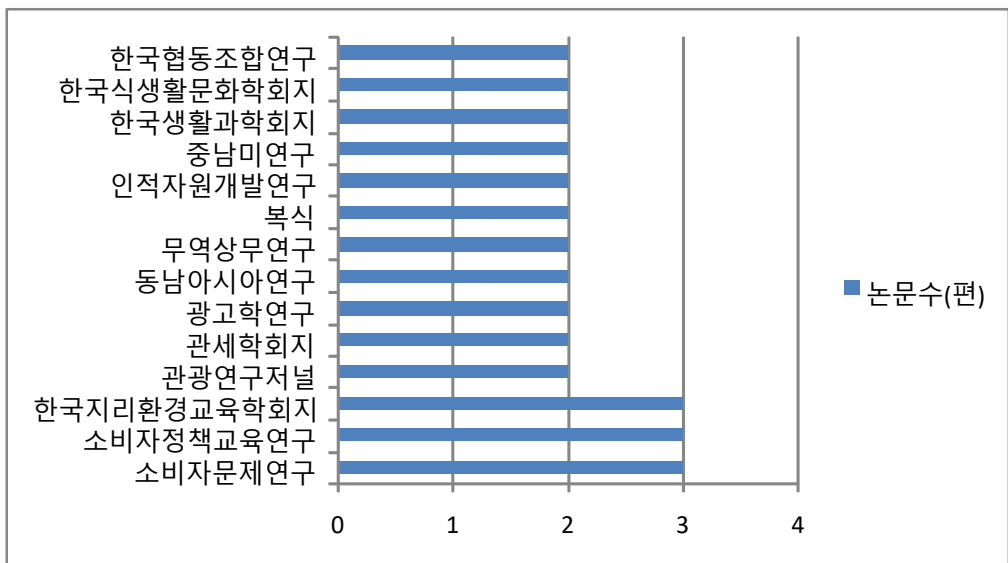
## 2) 논문게재 학술지

특정 논문이 주로 어떤 학술지에 게재되는지를 혹은 어느 대학 및 전공에서 주로 발표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해당 분야의 특성과 연구자들의 연구 행태나 연구 동향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조정은. 2017)’이다. 공정무역연구가 가장 많이 실린 학

술지는 소비자 문제연구와 소비자 정책교육연구학술지이지만, 그 양이 다른 논문들과 비교할 정도로 논문수의 차이가 많지 않다. 기타로 분류한 내용은 1편의 공정무역연구 논문만 게재된 학술지이다. <그림 6> 따르면 공정무역연구는 다양한 학회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표 3> 공정무역 논문게재 학술지

학술지명	발행기관	논문수(편)	비율(%)
소비자문제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3	3.8
소비자정책교육연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3	3.8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3	3.8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학회	2	2.53
인적자원개발연구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	2.53
광고학연구	한국광고학회	2	2.53
동남아시아연구	한국동남아학회	2	2.53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	2.53
관광연구저널	한국관광연구학회	2	2.53
기타	그외	21	



<그림 10> 공정무역 논문 게재 학술지

### 3. 연구 주제 / 대상 / 연구방법

#### 1) 연구 키워드

공정무역에 대한 연구주제는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22년의 논문들의 키워드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키워드는 국문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문키워드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키워드는 KH coder를 이용해 통해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정무역은 공정과 무역이 별도의 단어로 인식되기에 하나의 단어로 추출하였다. 총 추출어 1,242개중 769개의 단어가 분석용으로 사용 되었으며, 그결과 337개의 키워드로 분류되었다. 가장많은 키워드는 공정무역이었으며, 그 다음은 소비 구매 윤리 사회 Fair Trade 이다.

2000년대 후반 사회적으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환경보호와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윤리적소비’ 로 발전하며 윤리적소비의 실천운동으로 일컬어 지는 공정무역(2009 박미혜)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는 유소이(2011)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의류와 커피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논문이 다수였다. 2017년은 공정무역 커피제품의 구매의도를 연구한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그 외에 공정무역 생산지 사례나 국제 협력을 연구하기도 했다. (김정희2008; 엄은희 2010; 김이재2015). <그림 6>에 따르면 국내 공정무역연구는 윤리적소비, 구매, 의도, 행동을 연구한 논문이 많은 것을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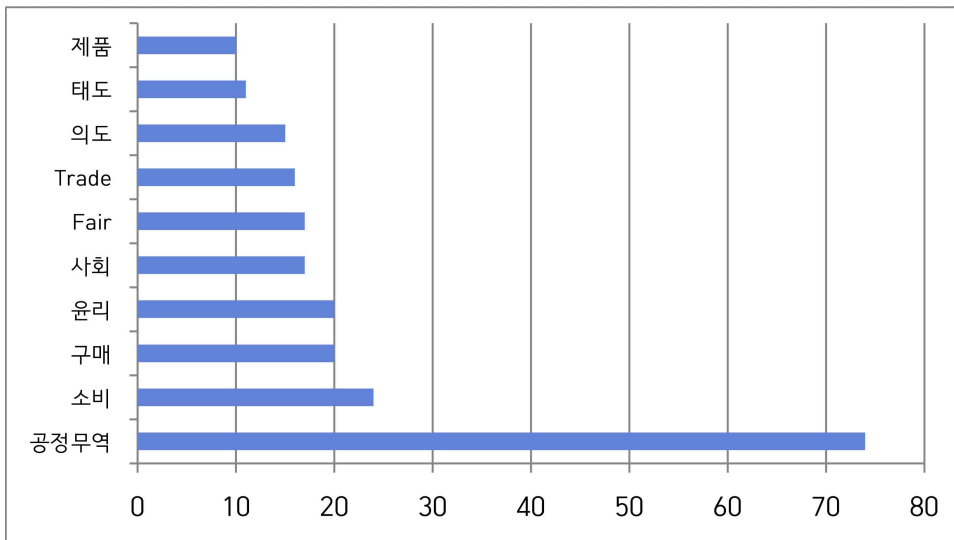
<표 4>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무역 키워드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키워드는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중복키워드는 제외하였다. 새로운 키워드를 사용한 논문을 통해 공정무역시장에 따른 연구동향을 볼 수 있다. 장승권(2016)의 공정무역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가치사슬을 분석하는 연구는 국내 공정무역 연구의 기존연구에서는 볼수 없었던 접근이었으며, 2022년에 발표된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참여 강화:아이쿱생협의 공정무역마을 코디네이터 액션러닝 사례(김선화 2022)는 한국의 공정무역마을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아이쿱의 공정무역코디네이터과정 연구하며 한국 공정무역 마을운동을 조망하였다.

&lt;표 4&gt; 공정무역 키워드 분류

연도	키워드
2007	공정무역, 자유무역, 불공정무역 국내무역법 개념정리 제도적 대응
2008	공정무역, 공정무역과 여성, 네팔리 바자로, 글로벌 여성주의, 지구적 시민사회, 지역 시민사회, 현장 여성주의, 상생, 상호적 힘 기르기
2009	윤리적소비 공정무역 소비자주권 세계시민성 불매운동, 상호의존성, 글로벌 장소감, 텍스트 재구성
2010	공정무역, 탐색적연구, 구매동기, 대안사회운동, 칠레 시민사회, 미주 자유무역협정, 비영리기구, 지구생산네트워크접근법, 생산자조직, 대안담론, 마스코바도, 소농, 브라질계기업농, 만두비라협동조합, 유기농사탕수수생산자
2011	공정무역, 외부효과, 비교우위, 자유무역, 관세, 대안경제, 국제기구, NGO, 마이크로크레딧, 공정무역단체, 지속가능한섬유패션, 섬유패션디자인, 공정무역상품
2012	공정무역커피, 윤리적구매법, 구매의도, 구매경험, 구매의사결정, 다차원적소비가치, 제품태도, 에텐프로젝트,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 공정무역제품신뢰,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윤리적소비성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동기유형, 공정회복기대, 윤리적책임의식
2013	공정무역제품, 정보요구, 내용별정보요구, 원천별정보요구, 구매의도, 윤리적패션, 사회적책임, 도덕적정체성, 자아해석, 세계시민성교육 실천적참여, 지구적문제, 재물신화, 비판적지리교육, 윤리적시민성
2014	공정무역, 공정무역메시지, 소비자윤리성, 자기감시도, 사회적증거, 광고태도, 제품태도, 구매의도 사회적배제, 윤리적소비, 귀인이론, 부정적정서, 인증제도, 윤리적소비의 물신화, 주변화, 지속가능사회, 자발적, 간소함, 로하스, 경제교육
2015	공정무역제품, 적합성, 신뢰성, 소비가치, 태도, 구매의도, 윤리적소비, 공정무역제품소비, 기부와나눔, 로컬소비, 환경친화적소비, 브랜드인지도, 이미지, 구매의도, 공정무역커피, 감정이입, 자아실현, 태도, 주관적규범, 재구매의도, 소속감, 베트남, 공정여행, 카페문화, 소비가치, 태도, 행동의도, 윤리적소비의식
2016	공정무역소비, 수정된계획모델, 프리미엄지불의사, 소비자정보, 윤리적구매 법, 구매의도, 성별르 조절효과분석, 광고채널 정서소구, 공정무역광고, 지각된소비자효과성, 소비자태도, 실험설계, 이해관계자이론, 신호이론 브랜딩, 서울, 가치사슬, 주류화, 페어워싱, 포섭, 희석, 소비자생협, 경영전략, 주요논리, 사례연구
2017	공정무역커피, 태도, 사회적규범, 구매의도, 보호무역주의, 공정무역의한계, 공정무역인증, 상표체제, 영세커피농민, 시공간적분석, 신자유주의화, 사회조절양식, 하위주체정, 생산자주도개발, 자유로의발전, 포스트개발, 계획행동이론,, 도덕적규범,인지도 구매경험도, 조절효과분석, 자기결정성이론, 자율성, 유능성, 관련성, 브랜드자산, 소비성향, 소비태도, 공정무역패션제품, 규범활성화모델, 예기된감정, 가치, 문화, 클러스터
2018	공정무역 공정무역학교, 유네스코 트랜스퍼21, 지속가능한발전위한 교육 베트남 공정무역조직, 사례연구 자기결정성 심지적육구, 개인영향력, 시장영향력, 공정무역제품, 협동조합간협동, 제도생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오스트리아, 공정무역운동, 페어트페이드, 공정한 사회 공정무역조직 지속발전 교육
2019	공정무역, 소비자유형화, 공정무역지식, 공정무역실천의지, 공정무역관여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천공동체 포토보이스 다목적운동 정의 공평 실천공동체, 포토보이스, 필리핀, 해외연수, 사례연구, 윤리적소비, 공정무역커피, 확장된계획정행동이론, 지불의사, 다목적운동, 정의, 공평, 공정, 윤리적소비, 하자담보책임, 물건의성상, 환경관계
2021	한국의 공정무역, 조직기반전략, 인증기반전략, 지역기반전략
202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해관계자 관리, 아이쿱생협, 공정무역, 필리핀, 액션러닝, 공정무역마을, 코디네이터양성, 생협, 지역사회참여



<그림 6> 공정무역 연구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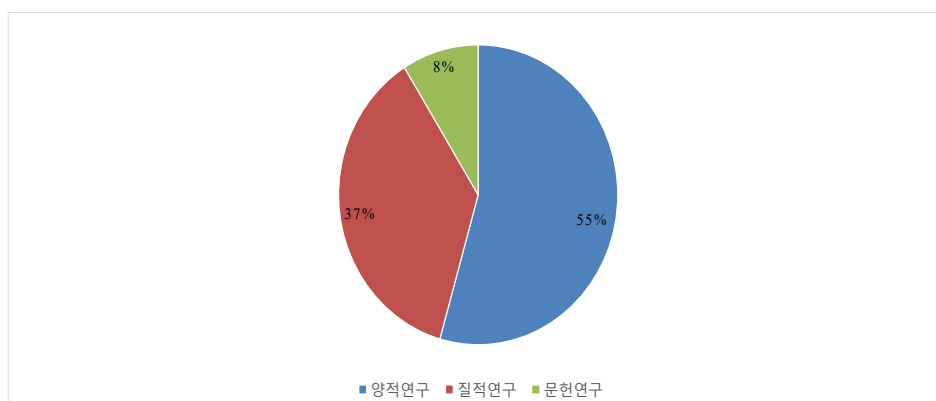
## 2) 연구대상

공정무역의 연구대상별 논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8> 과 같다. 분류를 통해 공정무역 연구의 대상의 분포를 볼 수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연구가 50%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정무역 조직 및 지역을 연구한 사례가 17%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정무역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8%로 가장 적은 편이다.

&lt;표 5&gt; 연구대상

연구대상	논문 편(수)	비율(%)
소비자	43	55%
생산지	8	10%
학생	6	8%
공정무역 조직(이해관계자), 지역	13	17%
제도 · 인증 · 디자인	8	10%
총계	78	100

## 3) 연구방법별 논문 비중



&lt;그림 7&gt; 연구방법별 논문 비중

&lt;표 6&gt; 연구방법별 논문 비중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연구논문(수)	43	29	6

국내 공정무역의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논문이 43편(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논문이 29편(37%), 문헌연구가 6편(9%) 순이다. 양적연구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문헌연구가 그에 비해 다소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연구 방법으로 연구된 논문은 활동가들을 인터뷰하거나 문헌조사나 참여관찰 방법론을 활용한 논문들이 있었다(장

승권 2021 ; 김선화 2016). 양적연구 방법으로 연구된 논문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활용한 분석 논문들이 있었다.(김영신 2016; 유소이) (김민재 2021; 김동호 2017)들은 문헌연구를 사용하였다.

## V. 결론

###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정무역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5년간 발표된 공정무역에 관한 KCI등재 학술지 총 78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논문 수,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정무역 연구는 2007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5.2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편은 아니었다. 2000년대 후반 사회적으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환경보호와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윤리적소비’로 발전하며 윤리적소비의 실천운동으로일컬어 지는 공정무역(2009 박미혜)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공정무역 연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12편의 논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등재된 논문12개의 주제는 소비자의 공정무역 물품 구매 행동과 의도에 관한 것이 많았다. 이는 생활에 일상화되어 있는 커피라는 제품 중 대표적인 윤리적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공정무역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추구 하는 가치를 파악(이선우 2015)하는 시장의 흐름이 연구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자별 논문 편 수를 분석한 결과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 저자 100명 중 14명에 불과하였다. 공정무역 연구논문을 다수 발표한 연구자들의 공정무역 연구 논문들은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를 측정한 논문(김영신2017; 오민정외 2014; 옥정원2018; 유소이 2012)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가치사슬을 분석하는 연구(2016 장승권)와 국내 공정무역 연구의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참여 강화를 주제로한 공정무역마을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김선화 2022)는 국내 공정무역 연구의 기존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접근이었다.

공정무역연구는 특정 분야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학, 지리학, 관광학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연구하였으나, 성공회대학교 소속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공정무역 관련 78개의 논문들은 양적연구 54% , 질적연구 29%, 문헌연구 9%로 분포되어 있었다. 공정무역의 구매의도와 행동을 연구한 연구들은 주로 계량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법·제도·정책 생산지 및 조직 사례를 연구주제로 삼은 연구들은 비계량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2. 결론 및 한계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갖는 한계들을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국내 공정무역 연구는 세 개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초기에는 공정무역 생산지 사례를 국제개발협력이나 지역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연구들이 있었고(엄은희 2010) 이 시기에는 2002년 아름다운 가게에 의해 공정무역 제품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며 국제개발협력으로 생협들과 NGO들에 의해 공정무역이 알려지던 시기였다.

윤리적 소비의 관점을 연구하거나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와 구매행동을 연구는 2011년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가 FI인증을 통한 다국적업 및 유통판매업체에서 공정무역인증마크가 부착된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게 되며 증가하게 되었다. 2010년 이후 인천을 시작으로 공정무역이 한국에서 공정무역운동이 시작되었다. 공정무역마을을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과 정치인들의 선언이후 공정무역마을을 심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설립(2013)되며 한국의 공정무역 운동은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으로 공정무역은 지역기반 운동으로 성장하며 공정무역의 연구의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나오게 되었다.

그동안 공정무역과 관련된 소비자행동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누가 왜 구매하고, 얼마나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연구하거나, 소비윤리와 공정무역 상품의 구매의도와 구매동기를 다룬 연구하였고, 공정무역 상품의 마케팅을 위한 연구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 관련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오프라인매장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장에서도 이용하고 있는데, 공정무역상품의 온라인판매와 관련한 실태나 현황 등을 분석한 연구가 없었으며, 국내 공정무역 단체들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년 부천시와 인천시의 공정무역마을 인증이후 국내에는 18개의 공정무역도시와 32개의 공정무역실천기관을 통해 공정무역마을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정무

역 시장이 확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공정무역이 소비자운동을 넘어 지역으로의 운동으로 성장한 만큼 다양한 관점과 대상으로 확대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공정무역이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와의 연대를 시작으로 한 운동이기에 세계시민, 세계시민성, 세계시민 의식을 고려한 연구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공정무역 이루어진 연구 현황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공정무역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을 역할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논문의 키워드에 대한 분석만 이루어졌다. 둘째, 연구 대상의 논문을 채택할 때 키워드를 ‘공정무역’으로만 한정하였다. ‘윤리적소비’ 나 ‘세계시민’ 등의 키워드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면 더 다양한 연구분석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정무역 시장 분석이 빠진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 그치게 했다. 특정 시기의 공정무역 연구들에 대해서 환경 및 맥락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는 등의 깊이 있는 후속 연구들이 더해진다면 공정무역연구의 범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공정무역의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Xiao Can Chen, 이승신 (2015),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제품 구매의도와 소비자교육 요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3), 279-291.
- 강용찬 (2007), 공정무역의 규범적 정립과 윤리적 접근, *관세학회지*, 8(3), 177-206.
- 고미애, 김지연 (2015), 공정무역커피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9(5), 105-116.
- 과효원, 양진숙 (2011), 섬유패션디자인 제품의 윤리적 소비에 관한 사례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3), 411-422.
- 구경모 (2010), 파라과이 소농의 생존 대안으로서 공정무역: 만두비라 협동조합의 사례, *중남미연구*, 29(1), 235-254.
- 김기영, 김지연 (2013), 공정무역 커피 인지도가 만족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7(1), 81-96.
- 김동호 (2017), 공정무역의 한계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73, 91-110.
- 김민희, 김민호, 오한모 (2016), 기업의 공정무역행위가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소비자들의 커피 브랜드 태도에 관한 실험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1(5), 1-14.
- 김병연 (2013), 윤리적 소비의 세계에서 비판적 지리교육: ‘공정무역’을 통한 윤리적 시민성 함양?,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129-145.
- 김선화, 황선영, 응우옌하프영, 장승권 (2018), 베트남 공정무역의 발전: 공정무역조직 사례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8(2), 1-45.
- 김선화, 장승권 (2018), 협동조합간 협동의 실천과정: 두레생협의 공정무역 사례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6(2), 93-113.
- 김선화, 장승권 (20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실천공동체 학습 : 포토보이스를 이용한 두레생협의 필리핀 공정무역 생산지 해외연수 사례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22(2), 1-30.
- 김선화 (2022),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참여 강화 : 아이쿱생협의 공정무역마을 코디네이터 액션러닝 사례, *인적자원개발연구*, 25(1), 53-80.
- 김세건 (2008), 새로운 시장 그리고 농민공동체 운동: 멕시코 UCIRI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10(1), 87-124.
- 김영신 (2016), 공정무역 소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1), 21-46.
- 김영신 (2016), 대학생소비자의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분석: 계획행동모델과 수정된 계획행동모델의 비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2), 1-18.
- 김영신 (2017),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 구매경험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3(2), 29-49.
- 김이재 (2015), 공정여행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커피의 가능성 탐색: 베트남 중부의 커피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4), 87-101.
- 김정훈 (2014),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활동중심형 경제 교육 프로그램: 「윤리적 소비로 함께 가는 우리」, *경제교육연구*, 21(3), 1-21.
- 김정희 (2008), 여성중심 공정무역에 대한 연구 : ‘네팔리 바자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 24(2), 113-145.
- 김종연 (2012), 녹색성장교육을 위한 체험 시설에 대한 연구: Eden project를 사례로, 한국사건지리학회지, 22(3), 1-20.
- 김지웅 (2014), 바리스타의 윤리소비의식이 공정무역커피 판매에 미치는 영향: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바리스타를 중심으로
- 김지현, 공용택 (2016), 공정무역도시로의 서울 브랜딩 구축에 관한 연구: 가스탕 마을, 영국 런던, 일본 구마모토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6(4), 21-27.
- 김혜원, 황금주 (2015), 공정무역 커피 소비자들의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20(3), 1-29.
- 류미현, 이승신 (2013), 공정무역제품 구매태도 및 의도에 따른 정보요구, 소비자문제연구, 44(1), 1-26.
- 민대기, 김신애, 권기대, 김동범, 이익주 (2012), 공정무역제품의 다차원적 소비가치가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19(4), 19-156.
- 박건영 (2011), 비교우위 원리와 공정무역의 조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2(1), 303-324.
- 박선미 (2013), 지구적 문제에 관한 실천적 참여의 의미와 교육 방향 검토: 공정무역에의 윤리적 소비자 참여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2), 69-85.
- 박선우, 윤혜현 (2015), 공정무역커피 구매고객의 소비가치와 태도 및 행동의도와의 인과관계 연구: 윤리적 소비의식의 조절효과, 외식경영연구, 18(6), 181-203.
- 박선우, 윤혜현 (2017), 공정무역커피 소비자의 가치, 태도 및 행동의도의 인과관계,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7(3), 257-267.
- 박종철, 오민정, 황윤용 (2013), 도덕적 정체성이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해석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4(5), 53-73.
- 박현정, 이상환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공정무역제품 신뢰, 구매의도,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와의 관계, 상품학연구, 30(7), 103-122.
- 박희현, 신진철, 류용규 (2017), 규범활성화모델에 기반한 공정무역제품 구매의사결정 과정: 문화 클러스터의 조절효과, 국제경영연구, 28(4), 45-76.
- 서정희 (2011), 공정무역 상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6), 1121-1133.
- 서지현 (2017), 공정무역인증 상표체제에 대한 역사적·공간적 고찰: 라틴아메리카 공정무역커피 사례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36(1), 105-134.
- 송예진, 신상무 (2017), 소비자의 소비성향과 패션제품 소비태도가 공정무역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25(5), 656-669.
- 송희영, 사지원 (2018),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독일의 공정무역교육, 독일어문학, 26(1), 95-116.
- 송희영, 사지원 (2018),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오스트리아의 공정무역운동, 독일어문학, 26(4), 115-138.
- 신형덕 (2011), 공정무역과 글로벌화에 대한 태도: 미래의 경영 인재를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15(2), 47-68.
- 심종석, 유혜영 (2019), 공정무역에 관한 평가와 성서적 기초, 로고스경영연구, 17(4), 105-124.
- 엄은희 (2010), 공정무역 생산자의 조직화와 국제적 관계망 필리핀 마스코바도 생산자 조직을

- 사례로, 공간과 사회, 33, 143-182.
- 오민정, 황윤용 (2014), 사회적 배제는 윤리적 소비행동을 감소시키는가?, 소비자학연구, 25(4), 181-203.
- 옥정원 (2015),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4(1), 143-162.
- 옥정원 (2017),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결정성 심리욕구와 브랜드 자산의 관계, 경영과 정보연구, 36(2), 59-79.
- 옥정원 (2018),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결정성 심리 욕구와 지각된 영향력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7(2), 283-297.
- 유소이, 노미나 (2011), 공정무역커피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도 분석, 농업경제연구, 52(3), 1-23.
- 유소이 (2012), 윤리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갭(Gap), 소비자문제연구, 41, 1-18.
- 유소이, 박재홍 (2012), 소비자의식을의 효과를 고려한 윤리적 제품의 프리미엄 지불의사 및 지불비용 분석-공정무역커피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3), 291-305.
- 유홍식 (2013), 윤리적 소비 측면에서 살펴본 패션산업에서의 공정무역, 한복문화, 16(1), 53-69.
- 이남섭 (2010), 미주 자유무역협정과 칠레의 대안사회운동 - 공정무역을 위한 경제 NGO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23(2), 83-116.
- 이데레사, 이희찬 (2019), 공정무역 커피의 가치평가 결정요인과 지불의사금액의 추정,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5(2), 141-150.
- 이용균 (2014), 공정무역의 가치와 한계- 시장 의존성과 생산자 주변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99-117.
- 이용균 (2017), 공정무역에서 생산자의 하위주체성 극복과 생산자 주도 지역 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47-61.
- 이조은, 이유리 (2016), 공정무역 의류 광고에서 정서 소구의 효과, 복식, 66(5), 49-65.
- 장남경 (2013), 윤리적 패션디자인을 위한 상품개발 프로세스 - 공정무역 시스템 관점에서, 복식, 63(1), 16-26.
- 장승권, 김선화, 조수미 (2016), 공정무역의 가치사슬과 주류화: 한국의 공정무역 사례, 국제지역연구, 25(4), 97-131.
- 장승권, 김선화, 전지윤, 정지현 (2021), 한국의 공정무역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조직기반전략, 인증기반전략, 지역기반전략 간의 협력과 갈등,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53(2), 199-234.
- 장승권, 김선화, 전지윤, 정지현 (2022), 이해관계자 관리를 통한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실천: 아이쿱생협의 필리핀 공정무역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32(1), 327-369.
- 장철호 (2009),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한 공정무역상품의 소비활성화 전략, 식품유통연구, 26(1), 51-71.
- 장청진, 박찬흠 (2012), 공정무역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한 패키지 디자인 개발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24, 259-269.
- 정선미, 신현상 (2019), 한국 소비자의 공정무역 커피 가격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대한 연구,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2(2), 3-44.



- 정신동 (2019), 윤리적 소비와 계약법: 공정무역에 있어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50(3), 31-52.
- 정주희 (2017),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소비가치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수미, 장승권 (2016), 주요 논리 관점에서 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전략: 아이쿱생협의 공정무역 사업 사례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4(3), 95-119.
- 조용훈 (2013), 윤리적 소비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27, 369-398.
- 차태훈, 하지영 (2010), 공정무역 제품구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소비문화연구, 13(1), 1-20.
- 최경숙 (2015), 사회심리적 요인과 윤리적 소비교육 경험이 청소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7(1), 67-83.
- 최아라, 구혜경 (2019), 대학생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구매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1), 304-315.
- 최경숙, 조철기 (2009), 지리를 통한 세계시민성교육의 전략 및 효과 분석: 커피와 공정무역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구 지리환경교육), 17(3), 239-257.
- 최현실 (2011), 아시아의 새로운 대안경제: 국제기구와 NGO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4(2), 73-109.
- 함수연, 조창환 (2014), 광고 속 공정무역 메시지 효과에 관한 연구- 소비자 윤리성, 자기감시도, 사회적 증거 메시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5(1), 267-288.
- 허은정 (2017), 소비자의 공정무역 실천행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변수의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2(9), 163-170.
- 홍나리, 김인신 (2017), 소비자의 공정무역커피 구매의도 결정과정 분석: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규범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9(1), 353-371.
- 홍나리, 김인신 (2017), 공정무역커피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자 태도 형성과 규범 및 구매의도 간 구조 관계 분석, 관광학연구, 41(3), 31-49.
- 박종철, 오민정, 황윤용 (2013), 도덕적 정체성이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해석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4(5), 53-73.
- 홍성현 (2014), 공정무역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태도의 영향요인, 무역연구, 10(6), 407-424.
- 황윤용, 오민정, 박종철 (2013), 도덕적인 소비자들이 모두 공정무역제품을 선호하는가?: 정의회복기대감과 사회적 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28(6), 137-160.



## Social Business Review 편집규정

### 제1장 총칙

Social Business Review(이하 SBR)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 이론과 실천 지식을 연구하는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이다. SBR은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학문토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SBR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분야 학문 발전을 위하여 수준 높은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편집할 것이다.

제1조(명칭) 본 규정은 SBR 편집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행하는 SBR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목적) SBR 편집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에 관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학술 논문, 사례 연구 등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하여 발간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의 산하 조직으로 협동조합경영연구소의 감독 및 지원을 받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된다.

③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는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임무) 편집위원회는 SBR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 SBR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역할과 자격)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고 SBR의 편집과정과 발간에 책임을 진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등의 관련 연구업적이 총10건 이상인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SBR 발전과 발간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④ 편집위원은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등의 관련 연구업적이 있거나, 국내외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 관련 단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임명한다.

### 제3장 투고

제8조(투고자의 자격)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론과 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라면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다.

제9조(투고의 종류 및 양) ① 투고의 종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 분야 논문,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 1. 논문 : 창의적 연구결과,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 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
- 2. 서평 : 국내외의 신간 서적에 대한 소개 및 논평.

②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③ 논문은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 용지 20매 내외, 보고자료·비평은 10매 내외, 서평은 2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투고일)\*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원고 작성 방법) ① 원고는 국문,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쓰여야 한다. 기타 언어로 작성된 논문의 접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원고는 한글 또는 MS워드 A4용지크기로 글자체는 신명조로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위/아래 20, 왼쪽/오른쪽 30, 머리말/꼬리말 25, 줄 간격 160, 큰제목크기 18, 본문글자 크기 10, 1페이지 분량 37행으로 20매 내외로 한다.

③ 게재가 확정되면 집필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식에 따라 재작성하여 e-mail로 편집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원고 제1면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원고제목과 투고분야와 원고 매수 및 투고일자표시하되, 투고자의 소속이 연락처에 관한 사항은 기입하지 않는다.

⑤ 원고 제2면부터 본문에 앞서 국문 및 영문초록을 기술한다.

---

\* (접수일) 원고의 접수일은 논문 파일이 본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논문의 초록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공헌 및 연구방향 등에 관하여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를 선택하여\* 한글 600자와 영문으로 180단어 이상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낱말(또는 낱말군)을 5개 이내로 선택한 다음, 논문의 초록 다음에 한 줄을 띄워 한글과 영문 주요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주요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본구조, 지배구조, 이사회

Key Words: consumer co-operatives, capital structure, governance, board of directors

- ⑥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 ⑦ 목차의 순서는 I, 1, 1), (1) 순으로 기재한다.
- ⑧ 수식의 번호매김은 별도 행을 이용하여 행 가운데 놓여야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장, 절의 구분 없이 수식의 오른쪽에 정렬하여 괄호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 ⑨ 모든 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며 해당번호(예: <표 1>, <그림 3>)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이고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표의 제목은 위에, 그림은 아래에 붙이도록 한다.
- ⑩ 주석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되 각주로 처리하고, 각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오른쪽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하며 그 내용은 각 면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
- ⑪ 본문 중 인용문헌의 표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처리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강나다(1995), Beaver(1968); (강나다, 1995), (Beaver, 1968)
  - 2. 저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어로 쓴다.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강나다나우리, 1995).” “...(Ball & Brown, 1968).”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제1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한글이름 뒤에 “등”, 영문이름 뒤에는 "et al."을 사용한다.  
예) “...(강나다 등, 1995).” “(Brown et al., 1995)”
  - 5.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에 의한 저술일 때는 최소한의 저자표기를 사용한다.  
예) “노동부(2010)”
  - 6.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연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

\* 초록은 포괄성(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함), 정확성(내용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함), 표현의 적절성(적절한 표현을 활용해야 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예) “...(강나다, 1995; Brown, 1995).”

7. 같은 연도에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을 인용할 때는 a, b 등을 두어 구분한다.

예) “...(강나다, 1995a, 1995b).”

8.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略字)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 완전한 이름(full name)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 사용한다.

예) 외부감사대상기업(외감기업),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 ⑫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장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은 논문에서 직접 인용된 것에 한정하며, 서적과 논문의 구별 없이 국문문헌, 외국어문헌의 순서로 하며, 국문문헌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 ⑬ 참고문헌의 표시방법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연도(괄호로 표시), 논문제목, 간행물명 (국내문헌의 경우 고딕체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호(No.), 페이지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명, 연도, 도서명 (국내문헌의 경우 고딕체로,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출판회수 (2판 이상), 권 (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이름의 순으로 기재한다.

- ⑭ 참고문헌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1. 국내문헌

강나다 (2017), 한국 협동조합의 미래, *Social Business Review*, 1(1), 100-125.

강나다, 나우리 (2017), 사회적 금융 정책 사례 연구, *Social Business Review*, 1(1), 126-150.

강나다 (2017),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이해, 한국출판사.

나우리 (2017), 한국 사회적 기업의 미래, 강나다 등(편), *경영의 미래*, 257-364. 한국출판사.

#### 2. 외국문헌

Becker, H. S. (1960), Notes on the concept of commit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6, 32-40.

Cohen, W. M., & Levinthal, D. A. (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 128-152.

Cullen, J. B., Johnson, J. L., & Sakano, T. (1995), Japanese and local partner commitment to IJVs: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outcomes and investments in the IJV relationship,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 91-115.

3. 호별로 쪽 번호가 처음부터 매겨진 학술지에 게재된 외국논문을 인용할 때

Bouchiki, J., & Kimberly, J. R. (2003), Escaping the identity trap, *Sloan Management Review*, 44, 20-26.

Krackhardt, D., & Hanson, J. (1993), Informal networks: The company behind the

charts, *Harvard Business Review*, 71, 104–111.

4. 편집된 책에 수록된 논문을 인용할 때

Gioia, D. A. (1986), Symbols, scripts, and sensemaking, In H. P. Sims (Eds.), *The thinking organization* (pp. 49–74), San Francisco: Jossey-Bass.

Albert, S., & Whetten, D. A. (1985), Organizational identity, In L. L. Cummings and B. W. Staw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7, pp. 263–295), Greenwich, CT: JAI Press.

Alderfer, C., & Sims, A. (2002). Diversity in organization, In W. C. Borman, D. Ilgen, & R. Klimoski (Eds.), *Handbook of Psychology* (vol. 12, pp. 595–614), New York: Wiley.

5. 단행본 책을 인용할 때

Organ, D. W. (1988),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good soldier” syndrome*, Lexington, MA: Lexington.

6. 워킹 페이퍼를 인용할 때

Bercovitz, J., Jap, S., & Nickerson, J. A. (2003), The Antecedents and performance implications of cooperative exchange norms, Working paper, Duke University Fuqua School of Business, Durham, NC.

7.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인용할 때

Deephouse, D. L. (2003), Stakeholder knowledge of corporate citizenship: Integrating reputation into the CSP/CFP debate,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th Annual Convention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Seattle.

8. 편집된 책 자체를 인용할 때

Wasserman, S., & Galaskiewicz, J. (Eds.). (1994), *Advances in social network analysis*, London: Sage.

9. 출판되지 않는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할 때

Hunt, M. (1972), *Competition in the major home appliance industry 1960–7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⑮ 투고되는 모든 논문, 보고, 자료, 비평, 서평에는 영문으로 제목과 저자명을 밝혀야 한다.

제12조(원고 제출 등)\* ① 모든 투고는 편집위원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② 논문을 제외한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게재가 확정되면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식에 따라 최종본을 작성하여 최종본 파일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③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쇄 시 초고는 필자가, 재고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⑤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장 논문심사

제13조(논문심사위원) ① SBR에 게재하려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제14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소지자가 된다.
- ②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의 익명성 및 보안)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6조(심사 기준과 판정)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③ 논리전개 및 논문구성의 충실성
- ④ 연구결과의 기여도
- ⑤ 문장표현 및 편집상의 요건

제17조(논문 심사)\* ① SBR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밝

---

\*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심사자들이 요구하지 않은 수정요구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결과 판정) ①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네 단계로 초심결과를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심사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평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논문의 종합판정은 아래 판정에 따른다.\*

1. 1단계 심사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 2인의 심사내용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최종 종합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게재가’ 판정논문은 그대로 게재하되, 투고자의 추가 수정을 허용한다.
3. ‘수정후 게재’ 판정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지시사항에 대한 의견서 및 수정된 논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판정한다.
4. ‘수정후 재심사\*\*’ 판정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지시사항에 대한 의견서 및 수정된 논문을 제출받아 동일한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한 심사위원은 교체하여 재심사한다. 재심 심사평가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3단계로 최종 판정한다.
5. ‘게재 불가’ 판정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심사를 종결한다. 단, 투고자의 재투고 의사가 있을 경우 논문제목변경 등 전면 수정 후 신규 투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논문심사자는 1차 심사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게재결정이 내려진 논문이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하며,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이의제기) 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한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며, 익명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환을 중재할 수 있다.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논문게재시기) ① 심사완료 후 게재 확정된 논문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발간되는

---

\* 2차 이상 심사논문의 경우에는 무수정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할 수 있도록 심사자에게 요청한다. 이는 2차 이상의 수정을 하고도 게재가 거부되는 경우를 막고 심사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심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 3의 심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수정후 게재 판정의 경우 심사자의 요구에 따른 충실한 수정여부의 점검과 최종 게재여부 확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 (수정기간) 수정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논문철회로 간주되며, 저자의 요청에 따라 재투고할 경우 최초투고로 처리된다.

호에 게재됨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순서는 게재확정일, 심사완료일, 투고일 순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①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호의 통일성, 투고자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게재  
순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장 발행 및 기타 사항

제21조(발행 횟수와 시기) SBR의 발행은 연간 2회로 하며 발행일은 8월 말일과 2월 말일로  
한다. 그리고 특별호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22조(발행 부수 등) SBR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3조(특별기고)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에 대해서도 제4장의 논문심사 규정들을 준용  
하여 필요한 수정을 거쳐 게재한다.

제24조(논문판권) SBR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가 소유  
한다.

제25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윤리헌장

## 제1절 연구자 연구윤리규정

###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2조 출판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연구윤리정보센터\*)

학술지와 학술지 간, 연구보고서와 연구보고서 간,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 학술대회 발표자료와 학술지 논문 간, 기존 연구 실적물 간 서로 중복으로 투고하거나 자기 표절을 하는 행위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제시된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은 전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봄

※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 일부

2)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 ①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 ②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③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 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용 책이나 잡지 등에 쉽게 풀어쓴 경우
-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구윤리정보센터, 중복게재의 판단기준, [http://www.cre.or.kr/board/?board=thesis\\_articles&no=1382539](http://www.cre.or.kr/board/?board=thesis_articles&no=1382539)

##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

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절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심의, 조치

제1조 「Social Business Review」에 게재된 논문이 위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자는 그 사실을 「Social Business Review」 편집위원장에게 기명 또는 익명으로 알릴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2조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장이 임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내용의 심각성을 심의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추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들의 익명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4조 편집위원장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된 논문의 저자(들)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의 「Social Business Review」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Social Business Review」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공지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 3년간 「Social Business Review」에 대한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논문심사절차

※ 접수 논문에 대한 다음의 심사과정은 편집위원장이 총괄합니다. 논문의 1차 심사기간(논문이 접수된 시점부터 논문의 1차 심사보고서가 저자에게 송부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주 이내로 하며, 8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2차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차 심사과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1단계: 논문접수~심사위원 선정 절차

#### (1) 접수

– 편집간사가 접수처리하면, 투고자,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확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 (2) 논문심사분야 확인 및 적합여부 확인

– 투고자의 논문내용을 고려하여 심사분야를 확인합니다.

투고 논문이 SBR의 편집방향과 연구분야에 부합하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합니다. 만약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하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3) 편집위원 선정

– 편집위원장은 2인 심사자를 지정하여 심사를 의뢰합니다.

– 선정된 심사자에게는 논문 사본 1부(저자 이름 및 소속 삭제)와 심사의뢰서(심사 기한 및 형식 명기)를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 2단계: 논문심사 절차

#### (1) 개별 심사

– 심사를 수락한 2인의 심사위원은 각각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서 심사소견을 작성하고 심사판정을 합니다.

– 논문의 심사기간은 심사자의 논문 수령 후 4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3) 집계판정

– 2인의 심사위원의 개별판정을 근거로 편집위원장이 논문에 대한 집계판정을 합니다.

– 집계판정 결과는 투고자에게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4) 논문파일 보완

- 집계판정결과에 따라 논문 투고자(교신저자)는 수정보완을 합니다.
- 투고자가 수정논문을 제출하면, 재심사해야 하는 심사위원에게 수정논문이 전달됩니다.  
투고 논문에 대한 최종심사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합니다.
- 최종논문 제출이 완료됩니다.



# Social Business Review

제6권 제1호

---

발 행 일 2022년 8월 31일

인 쇄 일 2022년 9월 2일

발 행 인 이 상 훈

편 집 인 최 우 석

발 행 처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08359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TEL) 02-2610-4805

인 쇄 다울프린팅

I S S N 2586-4939

---

※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판권은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